

# 사설

## 또 색깔론인가

최근 발간된 '월간 조선' 11월호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었던 최창익교수의 해방전후 인식과 6·25전쟁관을 문제삼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월간 조선은 '최창익위원장의 충격적 한국전쟁관'이라는 기사에서, 최교수가 '좌파는 혁명적, 우파는 반혁명적' 6·25 최대희생자는 북한민중'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의 사상에 의혹을 제기했다. 최교수는 이에 대해 "본문의 어휘와 문장을 의도적으로 문맥과 분리하여 인용함으로써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모해(謀害)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월간 조선측이 '제2의 건국'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면서도 장작 질문은 최교수 저작물의 논점을 집요하게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논쟁은 자유로워야, 사실은 신성하다'는 게 언론의 대원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월간 조선의 보도태도에서 언론활동을 넘어서 정치공세의 느낌을 받는다. 어떤 목적을 갖고 몇개의 단어를 추려내어 '끼워 맞추기식'으로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 입각'이라는 언론의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월간 조선의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최교수는 국가보안법에 걸려 감옥에 가도 몇번은 갔을 것이다. 문제를 삼은 일부 표현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냉전적 시각에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한나라당도 죽자 최교수를 공격하고 나섰다. 안호수대변인은 "최교수의 6·25관은 우리의 이념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면서 위헌장적의 해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최교수 저서의 요지가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제2건국'을 위한 정치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당 부설 연구소에서 최교수의 각종 저술을 정밀검토하도록 했다. 정부가 최교수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이골러 간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최창익교수는 이론과 실천면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학자다. 그럼에도 그에게 집중되는 색깔론 공세를 보며 우리는 金泳三정부 초기 극우 보수세력이 韓完相 당시 통일부총리와 金正男교문수석을 공격했던 일을 떠올리게 된다. 보수세력의 일체공격에 밀려 두 사람이 퇴진한 뒤부터 金泳三정부의 개혁정책이 좌초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대북정책에서 갈팡질팡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도 극우 보수 반개혁세력은 최교수를 표적삼아 공격함으로써 金大中정부의 정체성에 '색깔'을 덧씌우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반개혁세력의 공세에 밀리지 말고 소신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에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흔히 '좌파'를 가리킬 때 쓰이는 영미 '레디칼'(radical)의 어원은 '뿌리째'라고 뜻의 라틴어 '라디칼'이다. 말하자면 뿌리까지 파고들어 낱말이 따지는 단호한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급진적' 전통이 있다. 발본색원하는 정신이야말로 우리들의 고고한 자랑거리 아니던가.

오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는 정치와 교수는 헌정정치학회 학술회의 받은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원칙의 하나로 '관용'을 들고 있다. 한마디로 '관용'은 국가, 사회, 또는 개인 편에서 볼 때, 자신이 선택한 대로 믿고 행동할 수 있는 타인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비록 어떠한 행위나 신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해방 놓지 말아야 할 의무'를 일컫는다. 말하자면 공적인 일에서나 개인적 사안에서 시도가 지니고 있는 견해나 신조를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하지 않는 태도가 관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관용의 적은 바로 광신이다.

이렇게 볼 때 최창익 교수의 회문적 저술에 대한 <월간 조선>의 태도나 견해는

박 호 성



서경대학교수  
정치외교학

한 채무리 할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는 이데올로기를 민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가법 북한 연구라 하더라도 연구를 위한 학자의 지의, 특히 사회과학자의 접근 방법은

## '학문'에 대한 '광신적 폭력'

다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론만이 최고 최상의 것이라는 주장은 지극히 비합문적이고 독단적인, 그리고 반자유주의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최 교수의 저술은 국제학계에 시도 한번도문제에 대한 엄정한 접근과 분석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한 인본의 자의적이고 광신적인 해석에 의해 사상 면에서 매도당할 수 있는 학자가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뒤를 따라가고자 애쓰는 자유민주주의국에서는 '제3의 길'을 내세우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른바 '좌파논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 이것은 논쟁이 아니라 이념에 바탕한

신변은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 하였다. "적에게조차 배우는 것은 배움이 아니다"라는 영국의 격언이 있다. <월간 조선>은 이것을 배워야 한다. 시기가 옳다고 이간대시 남에게 까지 그것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것은 옳음이 아니라 자기도취일 따름이다. 다른 한편 마호메드는 "학지의 영광은 순교자의 피보다 신성하다"고 외쳤다. 이리석은 자는 친구로부터 많은 것을 얻지만, 지혜로운 자는 원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는다.

2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지금도 우리는 현대판 분서쟁유나 일삼고 있으니 어쩔 것인가.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사회로부터 추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질적 사상과 이론에 대한 폭력 또한 철저히 거부되어야 한다. 그것이 실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길이다.

한겨레 1988.10.23

### "6.25평가 친북논리 확연해

### 국사교과서 다시 써야할판"

#### 월간조선 특필

지난 19일 발간된 <월간조선> 11월호는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대통령자문 김세기회원장 최창익 교수 의 칼럼적 6.25전쟁관 연구'라는 글에 시 최 교수의 지시 <한국민주주의의 조성과 진영> <한국민주주의의 이해>의 일부 내용을 특히 김대중 회장이 주관하는 김대중 정부의 '제2국민운동'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월간조선은 최 교수의 지시 내용 가운데 '38도선 이상으로의 북진은...창국 임장에서 중국혁명 함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준명의 운 세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특히 '중국군의 개입을 변호했다'고 주장했다. 또 '350년 6월25일 새벽 4시라는 안 현실적 계기에 삼일의 초점을 두는 것은 역사 의 인과적 계기부의 중요성을 경시'한

다는 비판을 인용해 '한마디로 한국전쟁의 모든 책임을 김일성에게만 묻지 말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표현했다.

이 '지나친 과신이 그를 전쟁을 통 한 총체적 승리라는 유혹에서 헤아릴 수 없게 했고, 결국 그는 친민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것이다'라는 김 일성의 6.25개진 결정 관련 구절에서 '역사적 결단'이라는 부편만 떼어내 글 의 제목으로 쓰는 등 수차례 부각시켰 다.

월간조선은 최 교수 지시 내용의 인 용발췌를 통해 "김문적으로 최 위원장 은 6.25전쟁을 필기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편리하게, 북한에 대해서 유리 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며 최 위원장의 해석이 타당 하다면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의 6.25전 쟁 부분은 다시 써야 할 것이다"고 주장 했다.

## 문민때 한완상·김정남씨 중도하차 이장희 교수 사상시비로 소송번져

#### 월간조선 특필

조선일보사의 '진보인사'란 페이지에서는 제법 오래됐다. 저까지 <월간조선>이 앞장서 주로 제이온동권 출신이거나 진보·진영의 공직자·지식인 등을 골라 사상·이념을 문제삼아 공격하곤 했다. <조선일보>가 요양·소개하고 학 신시키는 방식이 예외였다.

이런 최창익 교수 등과 비슷하게 사상공격의 대상이었던 사람 중에 한인 상진 부총리 진 통일위원장이 있다. <월간조선>은 93년 8월호 '추락-한 일상 통일위원장의 문제 논쟁-문제 발원' 기사에서 한씨가 한국사회회화 회장으로 있던 92년 회의 이념으로 한 건반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권 두 논문 등을 근거로 '한 장관의 한국

제문자인지 의심된다'고 논평을 올렸는데 비외인된 과거 노선과 관련된 강력침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로 인해 빚어헤는 소송으 로까지 발전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장 희 <한겨레>에 교수 간을 들 수 있다. 월간조선은 지난해 7월-9월호를 통해 통일위원의 통일 캠페인 참가도서인 <이런이런 위한 통일이야기-나는야 통일 1세대> (원제:교육 주관사에 대 해 강원상·김정남의 일부기 해박한 채 동 어린이들 글의 일부가 해박한 채 지지인 이 교수의 의도대로 이용됐다 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지난해 8월29일시 3인 사설에서 '혹시라도 이런이런의...생 각을 번영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은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고

## 한두 구절로 전체 논지 왜곡 반학술적 논쟁 이해못해

#### 월간조선 특필

마이클 로빈슨  
(미국 인디애나대·동아시아학)

나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최근 최창익 교수의 연구업적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에게 최 교수 의 논지는 필독서로 인식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충분한 자료탐 색, 객관적 분석과 치밀한 논리 전개 등으로 한국정치에 관한 논 의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남북문제에 대해 매우 합 리적인 태도를 지켜왔다. 그는 남북 분단이나 한국전쟁의 원인을 주로 국제적 요인에서 찾아야 하나, 남과 북의 정치체력 역시 책 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해 왔다. 그는 모든 논문 이나 토론에서 이런 객관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내가 확인 한 바 어디에서도 일방적으로 북한만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주 장을 편 적이 없다. 그는 결코 친북파가 아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로서 국제학계에서 인정된 합리주의자로 평가 받고 있을 뿐이다.

특정 단어나 한두 구절의 내용을 들어 그의 합리주의적 견해 전체를 왜곡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그것을 정치적 쟁점으 로 삼으려 하는 것은 유치한 발상의 소산이다.

냉전체제는 무너졌다. 이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남북한의 거 리를 좁히며 한반도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불필 요한 대립구도는 남북 양쪽에 좋지 않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논리로 최 교수의 학술적 견해 까지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가 한 개인이 아니라 주장을 감인 히터라도 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학술적 논쟁은 한국사회의 편협성과 경직성을 국제 학계에 널리 알려 국가 이미 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런 가슴거리도록 더 이상 양산해서는 안된다.

#### 월간조선 특필

마이클 로빈슨  
(미국 인디애나대·동아시아학)

나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최근 최창익 교수의 연구업적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에게 최 교수 의 논지는 필독서로 인식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충분한 자료탐 색, 객관적 분석과 치밀한 논리 전개 등으로 한국정치에 관한 논 의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남북문제에 대해 매우 합 리적인 태도를 지켜왔다. 그는 남북 분단이나 한국전쟁의 원인을 주로 국제적 요인에서 찾아야 하나, 남과 북의 정치체력 역시 책 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해 왔다. 그는 모든 논문 이나 토론에서 이런 객관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내가 확인 한 바 어디에서도 일방적으로 북한만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주 장을 편 적이 없다. 그는 결코 친북파가 아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로서 국제학계에서 인정된 합리주의자로 평가 받고 있을 뿐이다.

특정 단어나 한두 구절의 내용을 들어 그의 합리주의적 견해 전체를 왜곡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그것을 정치적 쟁점으 로 삼으려 하는 것은 유치한 발상의 소산이다.

냉전체제는 무너졌다. 이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남북한의 거 리를 좁히며 한반도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불필 요한 대립구도는 남북 양쪽에 좋지 않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논리로 최 교수의 학술적 견해 까지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가 한 개인이 아니라 주장을 감인 히터라도 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학술적 논쟁은 한국사회의 편협성과 경직성을 국제 학계에 널리 알려 국가 이미 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런 가슴거리도록 더 이상 양산해서는 안된다.

제보 문의 general@mail.hani.co.kr 한겨레 (1988.10.23)

## 이분법 시각으로 겨두절미 균형잡힌 최교수입장 왜곡

#### 월간조선 특필

◇ 백영실 한국정치학회 회장 (전국대 정치학) = <월간조선>의 기사는 사실과 동떨어진 왜곡 보도로 최창익 교수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이다. 최 교수는 6.25전쟁 중 한국 헌법에 대해 전통주의의 수정주의 적 견지를 넘어 사실에 입각한 균형감각을 강조해온 한국의 대표 적 학자다. 최 교수가 논문에서 6.25전쟁이 '역사적 결단'이라 고 표현한 것은 이 전쟁이 한국 정치지형을 결정적으로 규정했다 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으로 쓴 것이 분명하다. <월간조선>은 논문의 일부 단어와 지구를 가지고 최 교수를 친 북한 학자로 일방적으로 몰아갔다. 이는 기자의 오해이거나 의도 적인 왜곡이기 때문에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김희준 인천대 총장 = 최 교수의 논문은 지난 96년 발간돼 이미 학계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월간조선>의 기사는 논문의 전체를 무시한 채 몇 구절과 단어를 가지고 전체 의미를 왜곡했다. 언론이 표피적으로 왜곡된 사실로써 인신공격을 가하 는 것은 최 교수할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 스럽다.

◇ 이신철 역사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최 교수는 김일성이 한 국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참다운 민족국 가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한 인물이라는 시각을 견지해온 학자다. <월간조선>이 북한 남침을 미국이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브루 스 커밍스의 수정주의적 한국전쟁관용 최 교수가 답하고 있다 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월간조선의 글은 '내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면 철저히 다른 편'이라는 학술적으로나 상 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인행민 기자

# 時論

10월 24일 49면



우리 시대의 대표적 정치학자로 꼽히는 **崔康鎔** 교수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지금까지는 멀쩡하다가 **金大中**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그의 사상이 도마위에 올랐다.

## 일부언론 '사상 칼춤'

그것도 검찰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월간조선이 칼춤을 시작했다. 5년전 **金泳三** 정권 초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에 취임한 **韓完** 교수를 사상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 퇴진시킨 바 있는 일부 언론

"학자의 학문적 성과를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특정 문구를 작위적으로 재단하여 문제삼고 **崔교수**가 마치 친북적인 학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 성명)는 바로 그대로이다.

학자의 연구성과, 특히 대통령자문위원장의 논문이 조명되고 비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논문의 전체를 비판해야지 단어 몇개 문장 몇 구절을 토막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정당한 비판의 자세가 아니다.

월간조선은 **崔교수**의 글에서 "6.25 최대희생자는 북한민중" 등 몇 구절을

## 매카시 망령 무엇을 노리나

이 다시 '사상 칼춤'을 추고 나섰다. **金泳三** 정권은 **韓부총리**의 퇴진을 계기로 개혁이 좌초되면서 수구세력에 둘러싸여 참담한 국정실패를 가져왔다. 이런 경험을 가진 국민들은 **崔교수**에 대한 '사상 칼춤'이 무엇을 노리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金三雄 (상무·주필)

뺏아서 사상에 붉은색을 칠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반공적 내용은 철저히 외면한다. 예컨대 "주체사상은 불가모양의 김일성 유일체제를 강화하는 대중동원의 이념적 기제로서 작용하여 왔다. 이제 주체사상은 민중이 오직 하나의 정점에 의해 지도되고 동원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민중사회, 민중대상화의 기능을 탈피하여 문자 그대로 민중주체의 민중자율성의 원칙과 이념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국전쟁의 한 해석")

이 구절은 북한의 가장 이른 대목이다. 이 내용만 떼어내 읽으면 **崔교수**는 극우적 반공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 정권 상처내기 의도

월간조선의 목표는 **崔교수**가 아니라 **金大中** 정권이다. "崔교수가 관계한 '제2건국운동'은 어디로 가나"란 광고문에서 나타나듯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2건국운동, 나아가 **金大中** 정권에 용공의 누를 씌워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정부를 비판하고 학자를 비판하는 행위는 언론의 본질이다. 하지만 비판이 비판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공정성과 사실성에 입각해야 한다. "학자의 학술 연구를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잣대에 의해 견강부회식으로 왜곡하여 매도하는 것은 학자의 인권과 명예에 대한 침해" (한국정치학회)이며, "언론이 표피적으로 왜곡된 사실로써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崔교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김학준 인천대총장) 매카시즘이다.

한국언론과 정계일각에 파리를 쫓는 매카시 망령을 박멸하는 길은 없는가.

(kmsu@seoul.co.kr)

1950년대 미국사회에 공공선동을 일으켰던 매카시는 교묘한 과장법으로 상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다. 정보관계 기록의 '반역'을 '반역자'로 묘사하고 '의의자'는 '중요한 피조사자', '러시아 이름'을 가진 '세명'은 '러시아인 3명', '고위관리'는 '고위 관리들', '첩보원'은 '첩보원들'로 조작하였다. 그리고 '소련의 포섭대상'은 '소련의 첩보원' '친공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바꿔서 활용했다.

또 '자유주의적'이란 문구는 '공산주의 성향이 강한'이란 표현으로, '공산주의 동조자'는 '활동중인 공산주의자'로 바꾸었다. 한마디로 단어를 조작하여 억지 공산주의자로 만든 것이다.

이런 결과 로젠버그 부부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가 반역죄로 기소되어 처형되고, 원자탄제조를 지휘했던 오펜하이머 박사마저 반역죄로 몰려 처벌받게 되었다.

## 반공 내용 철저 외면

그러나 허위나 조작이 오래 가기는 힘들다. 철저 변호사의 끈질긴 추적으로 멀미가 잡힌 매카시는 병역사실의 조작등 개인 비리까지 드러나 탄핵되면서 미국사회의 매카시선풍은 사라졌다.

한국사회의 매카시즘은 아직도 기승을 부린다. 월간조선의 **崔교수**에 대한 모해는 언론 매카시즘의 전형이다.

# "월간조선 이념적 폭력"

정치학회 성명 "최교수 논지 부당왜곡"

한국정치학회(회장 백영철 건국대 교수)는 23일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한국전쟁 연구를 다룬 <월간조선> 11월호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문제의 기사는 기본논지의 공정한 인용에 바탕한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논지의 부당한 왜곡에 근거한 이념적 폭력"이라고 하며 "학자의 연구를 이데올로기적 잣대에 의해 왜곡·매도하는 것은 학자의 인권과 명예, 그리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5면

정치학회는 이어 "언론의 자유는 '왜곡의 자유' '오보의 자유'가 아니라

"다"라며 <월간조선>의 스매카시즘적 매카시즘의 중단 △문제의 기사에 대한 정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쪽은 "최교수는 '제2의 건국'의 철학·정책방향 등을 마련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언론은 공인의 사상을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교수는 이날 <월간조선>이 자신의 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월간조선> 11월호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의길 일민 기자

# "최장집교수 논문 문제없다"

청와대

<월간조선>이 최장집 교수(고려대)의 한국전쟁 논문에 대해 사상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3일 해당 논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실무진은 월간조선 광고가 나간 직후 기사 내용과 논문을 입수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관련 비서관들에게 분석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사를 읽어 보았더니 대체 논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썼는지 의심이

없다"며 "논문에 사용된 단어 몇 개로 그런 식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 관계자는 "해방 직후 정세에 대한 최교수의 시각은 소장·중견학자들의 중심 흐름"이라며 "최교수가 좌파라던 상당수의 정치학자들이 좌파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최교수의 거취도 전혀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한 고위관계자는 최 위원장 경질 검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 대체 뭘 잘못했는데 경질하느냐"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성한용 기자

「한겨레」 10월 24일

## 왜곡보도' 심경밖인 최장집 교수



# 한국전쟁 인식지평 넓히고 싶었는데... 논지 뒤집어 입맛따른 재단 유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는 23일 <월간조선> 11월호의 한국현대사 연구 왜곡보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만나 자신의 입장과 심경을 밝혔다.

-<월간조선>이 문제시한 저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은 어떤 책인가.

=해방 전후 좌우투쟁 속에서 생성된 극우적 시각이 한국현대사 인식을 지배해 왔다. 탈냉전이 되고 국내외 연구업적이 쌓여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혀졌다. 이런 바탕 위에서 한국전쟁을 국내정세뿐 아니라 국외정세에 맞춰 객관적으로 연구해 인식의 지평을 넓히려는 것이었다.

-저서의 일부 내용에 대한 이념적 비판을 어떻게 보는가.

=반공도덕주의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학문적 차원의 이념비판이 아니다. 나의 학문적 입장에 대한 왜곡을 넘어 논지를 뒤집어버린 이번 사태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월간조선> 11월

호는 김일성의 6.25 개전 결정과 관련해 전후 맥락이 빠진 채 '역사적 결단'이라고 인용함으로써 마치 내가 이를 찬양한 것처럼 표현하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내가 쓰지도 않은 단어인 '위대한 결단'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내 저서에서는 그 결정은 오판이었다고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앞뒤 문장에서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결정에 따른 남침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한반도 역사에 엄청난 비극과 후유증을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엔 이념공세 사태가 종종 일어난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회의 민주화로 기독교 세력들의 입지가 불안정해지자 냉전반공주의로 정치적 지평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한완상 전 부총리,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 이장희 외교통무부 차관 등에 대한 이념공세 등이 같은 맥락이다.

-국민정서 속에 깔려있는 이념적 금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시민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일부 정치권과 특정언론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넓어졌다. 특정언론과 정치권이 시민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반영하기보다는 자신의 구미에 맞게 의도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더 정확한 현실이다.

-정책기획위원회의 한 과제가 이런 이념적 갈등사태의 해소 아닌가.

=넓어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해답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요체는 바로 시민사회의 욕구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글 정의길, 사진 이정용 기자

한겨레 10.26

# 아침햇살

이원섭 논설위원



인종차별로 간첩 누명을 쓴 유대계 프랑스군 대위 드레퓌스의 무죄를 밝힌 지식인들의 집단 저항은 프랑스 지성사에 획을 그은 빛나는 전통으로 남아 있다. 글씨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반유대 성향의 상관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신형을 선고받은 드레퓌스에 대해 프랑스 군부는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진상을 끝내 숨기려 했다.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사소한' 사건이었지만, 진실을 옹호하려는 지식인들의 자세는 단호했다. 왕당파와 국수주의적 언론이 "국가안보와 이념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공격하는 가운데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 라는 유명한 공개 편지를 발표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고 망명했다. 올해 1월 편지 발표 100돌을 기념해 프랑스에서는 대대적인 추모행사가 열렸다. 당시 반유대주의에 바탕한 국가지상주의 이념의 폭력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위력

다. 우리 지식인들은 언론에 유독 약한 것으로 정경이 나 있다. 지식인들의 활동이 주르 언론이 제공하는 마당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밀브어 독립 것이 없다는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이를 알리고 유명세를 타는 데 언론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실제 언론의 힘을 빌려 학문적 성과나 예술적 업적 이상으로 과도포장된 인사들도 속하다. 웬만큼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대개는 그냥 넘어간다. 그러다보니 언론이 절제력을 잃고 전횡을 부리게 된다. 몇몇 언론들이 그동안 언어 폭력을 마구 휘둘러온 연유도 이런 풍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시민단체들까지도 언론비판에는 수위조절을 한다.

## '검증' 빌려 이념공세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보수언론들은 누구도 나서서 견제하지 않는 가운데 어느새 권력 그 자체로 변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언론

# 지식인이 말해야한다

을 떨치는 반공으로 무장한 국가지상주의를 연상케 한다. 겉보기만 다를 뿐 그 안에 도사린 반이성적 이념의 폭력성은 비슷하다.

## 지성사 빛낸 드레퓌스 사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최장집 교수(고려대)에 대한 <월간조선>의 이념공세는 우리의 지적 풍토가 얼마나 척박한지를 잘 보여준다. 나라 안팎에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는 학자의 논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친북인사로 몰아가는 폭거 앞에 많은 이들은 아연해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왜곡됐다며 본인이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최 교수가 속한 한국정치학회도 반박 성명을 냈다. '사실 및 논지 왜곡에 근거한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정치학회의 성명서 채택은 극히 이례적이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지식인들의 개별·집단적 서명운동은 자주 있었으나,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한, 그래서인지 매우 '정치적' 처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학회가 공식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권교체가 된 탓은 있지만, 그래도 지식인들이 유력한 언론과 맞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

의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도마에 올려 '여론'을 일으키고, 극우보수세력들이 거들고 나선다. 실제 몇몇 인사들을 그런 식으로 퇴출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 정권의 한완상 전 통일원 장관이나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 등이 대표적 희생자였다. 그리고 개혁의 기세는 꺾였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본령을 벗어나는 독선이자 횡포다. 후백제리와 견학된 잣대로 타인의 사상을 재단하는 것은 사회를 획일화하고 이념적 지평을 좁히는 폭력이다. 실사공작에 있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 비판은 검증의 말을 쓴 인신공격이다. 이번에 최 교수를 겨냥한 속뜻은 미루어 짐작키 어렵지 않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혁과 반개혁이 힘을 겨루는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식인들은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스스로 당당히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력이라든 '언론권력'이라든, 부당한 이념 공세에 굴종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 풍토를 더욱 황폐화할 뿐이다. 더이상 이념공세가 통용되게 해서 안된다. 침묵은 때로 방조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 확립과 민족통일을 위해서도 한국 지성사에 획을 긋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 崔章集교수 옹호여론 비등

서울신문 10월 27일자

崔章集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고려대 정치학과교수)의 한국 현대사관련 저술 내용이 북한에 유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난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화합시민연대(공동대표 張潤煥)와 국민화합운동연합(사무총장 崔成春)은 26일 성명을 발표. "조선일보"는 정치학자의 연구논문을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공격하며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이 마치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운동인 양 의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매카시즘적인 의심과 시대착오적 여론조

작을 통해 체제부정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매카시즘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최교수의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정치학회(회장 白榮哲)도

인 학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려대학교 정의과 교수들도 "월간조선"의 기사는 단어와 자구의 선택적 인용과 표현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최교수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주관적 잣대에 따라 최교수의 사상을 공격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월간조선"의 기사는 사실 및 논지의 중대한 왜곡이자 이데올로기적 인신공격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제의 기사는 오랫동안 한국정치를 가르치고 연구해온 학자의 학문적 성과를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작위적으로 재단하여 문제삼고 최교수가 마치 친북적

국민화합시민聯

한국 정치학회

고대 총학생회

'崔교수 인권유린' C일보 사과해야

학자의 학문적 성과를 작위적 재단

왜곡언론 불매운동·항의전화 계획

고려대대학원 총학생회도 "이번 보도는 학문적 저술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을 가함으로써 한 교수 차원이 아닌 전체의 학문적 성과와 발전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불매운동과 항의전화운동 등을 펴겠다고 밝혔다. (李鍾洛기자 jrlee@seoul.co.kr)

한겨레 10월 28일자 독자투고

## 한사람의 사상 왜곡시켜 울가미 씌우기 부끄러워

남북분단의 가장 큰 아픔은 개인적으로는 이산가족의 아픔이요, 사회적으로는 사고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제약은 학문적·문화적 후퇴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를 과거로 회귀시키거나 정체시킨다. 우리는 늘 반쪽의 눈으로만 사회와 경제와 정치를 봐야 하는 족쇄에 묶여 있다. 분단상황에서 완전한 사상의 자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체념한 지 오래지만, 한 사람의 사상을 마음대로 왜곡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선일보사가 전체 맥락에서 최장집 교수의 글을 분석하지 못하고 이미 설정해놓은 왜곡된 시각으로 부분만 가지고 울가미를 씌우는 것을 보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박종대/연세대 행정학과 4년

한겨레 10월 28일자

## "변화와 개혁 가로막는 행위"

최장집교수, 조선일보 강도높은 비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는 27일 <월간조선>과 <조선일보>가 최근 자신의 한국현대사 관련 저서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새 사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현실에서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행위"라며 "특정 언론의 사익을 대변하는 언론은 더이상 사회의 공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궁진 의원(국민회의) 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특정 언론사와 현대사

왜곡 시비에 휘말린 것이 송구스럽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미 권력화한 특정 언론이 특정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궁 의원의 후원회장은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은 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사회) 모델을 찾으려는 협착한 언론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현 시점은 과거 국가 개인의 권위적인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이에 걸맞은 새 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단계"라고 역설했다. 신승근 기자

“최장집 죽이기’ 조선일보 노선은 파시즘 논리”

# 학계·시민단체 ‘사상공세’ 반격

## 민교협·학단협 공동 왜곡 보도 토론회 마련

학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최장집 교수 논문에 대한 <월간조선>의 ‘사상공세’와 관련해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월간조선이 과거 한완상 통일부총리와 김정남 청와대 고문수석에게 이념공세를 펼칠 때 학계 등에서 거의 대응이 없던 것과 비교해 매우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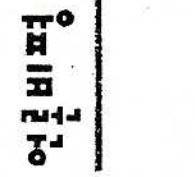
주목된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 의회(민교협)와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는 다음달 2일 프레스센터에서 인문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최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초하 민교협 공동의장은 “50년대 매카시즘보다 심한 월간조선의 이번 사상공세는 학자의 지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폭력 행위”라며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돼 일부 극우언론을 개혁하는 출발점

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대학원총학생회(회장 김준형)도 이날 이 대학 총학생회 등과 함께 28일부터 월간조선 반박광고 모금 운동과 함께 항의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성장 성유보)은 이날 성명에서 “조선 일보사는 최 교수에 대한 짜깁기식의 극우적 사상공세에 앞서 친일행각, 유신체제 지지,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 등 과거 행적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조선

일보사가 자신의 노선과 다른 논리를 가졌다 해서 최 교수를 반민족적 또는 반국가적 인사로 단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폭력”이라며 “조선일보의 사상공격적 노선은 건전한 우파의 논리가 아니라 파시즘적 논리”라고 밝혔다. 경희대·서강대 등 전국 15개 대학원 총학생회가 결성한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도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올바른 지식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혁 김태경 기자

사회적 연애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그러한 사회적 의미를 가장 강력하고도 폭넓게 감제하는 것이 바로 인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에서는 날마다 티저 나오는 특정 사건이나 그와 연관된 인물들에 대해서 특정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 독자나 시청자들은 그런 의미들을 새겨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 된다. 그러나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한 사회의 인문이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종종 서로 다른, 때로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문을 ‘의미투쟁의 마당’이라고도 한다.

최근 불출한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논저에 대한 인문 보도들도 인문이 이러한 ‘의미투쟁의 마당’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월간조선> 11월호에 의해 촉발된 최 교수의 ‘사상 검증: 보도외 그에 대한 인문적 보도들은 동일한 테스트에 대한 전혀 다른 의미화의 실천 양태를 논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조선일보>는 최 교수의 저서에 나타난 6 25 전쟁과 현대사 인식이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존재이유를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 교수가 핵심적으로 관



강상현  
연세대 교수  
인문학

여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제2한국 운동’ 자체가 의문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보도를 보면, 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추격적인 풍조 태도를 보인 집단은 야망인 한나라당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완전한 의 시각을 논박하거나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가장 많은 지면을 내어 조선일보사쪽이 “남신 유령을 퇴상리려고 최 교수를 ‘죄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한겨레가 조선

## ‘최장집 보도’ 생산적 독법

일보사에 대해 가장 공세적인 맞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경쟁자인 <중앙일보>도 “생사람 잡는 지식공토”라는 논설에 이어 이를 읽고 지지하는 독자투고까지 곁들이고 있다. 또한 과거에 종종 ‘색깔논쟁’에 앞장서던 <서울신문>까지도 이제 이름을 바꾼 탕인지(11월부터 <대한매일>로 변경)이 되면 정권이 바뀐 탓인지 “또 색깔론인가”라는 사실로 조선일보의 ‘색깔론’을

이런 사건과 그 보도는 국내 신문이 이념적 편향이나 정치 권력과의 관계는 물론, 경쟁관계에 있는 신문사들간의 예민한 신경전을 미루어 짐작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좋은 사례의 하나가 될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언론보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숙한 독자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그 결론은 독자들의 심중에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되래 질타하고 나섰다. 주요 일간지의 하나인 <동아일보>는 의외로 팔광을 켜 채 뚜렷한 견해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책이 상책인 속사정이 워릴 법도 하다. 같은 보편 우리 언론도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한 ‘의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최 교수 사건에 대한 편집의 유부·대담·강약 등이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보도들을 통해 각 신문사들이 최 교수 사건 혹은 그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의미화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미화의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0.29 6:00

### 독자칼럼

30년 동안을 색깔과 사상사 비로 시달렸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에서 이번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최장집 교수에게 그 시비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 조선일보쪽의 기사를 보고 있는 추홍되는 주장들이 긴장·보완하는 가운데 학문과 사회의 발전도 보장된다'라는 그들의 취지를 찾을 수 없다. 다만 과거 그들이 개혁적 학자 출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보수우파적 시각에서 일방적 사상사비판이 반복될 뿐이다. 상대방의 글에 대해서 논평을 하려고 한다면, 특히 그 글이 학문

적 논문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안목이나 기본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옳을 것이다. 논문 집필자의 역사인식론과 방법론, 연구자로 등에 걸친 전반적인 이해없이 서투른 말꼬리 잡기식의 시비질기를 하기에는 조선일보사는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이 크지 않다 싶다. 조선일보사가 '남전의 결과물인 본인이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공인의 '학문적 성향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임무이자 의무'라고 말한다면, 그 자신들이 지난 80년 광주시인의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



이만호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조선일보를 말한다

10.30 한겨레 6면

하는 공산체제의 움직임이라고 거리낌없이 써내려간 것도 고유임무였고 의무였는가?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들은 과연 국가 발전방향을 설계하고 이에 기여함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최소한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학문적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을 검증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만호는 1945년 11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이 있다.

이만호는 1945년 11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이 있다.

이만호는 1945년 11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이 있다.

## 시대착오 사상점증 논리 버려라

인/티/뷰 최장집교수 저서논란 관련 환원상 진통일부흥리

### 좌우 막론 단란 사회는 인륜의 범죄로 귀결 "최고수 저서는 통일론 지평 넓히려는 시도"

이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강성대' 하...  
[Text continues with detailed analysis of the article and author's views on social harmony and humanism.]



최장집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최장집교수는 1945년 11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이 있다.

최장집교수는 1945년 11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이 있다.

최장집교수는 1945년 11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이 있다.

### 한국은 권위주의로 돌아가려 하나

한 공화국도 없다. 이념적인 이유로 최 교수...  
[Text discusses the political and social challenges facing South Korea.]

한 공화국도 없다. 이념적인 이유로 최 교수...  
[Text continues the discussion on authoritarianism.]

한 공화국도 없다. 이념적인 이유로 최 교수...  
[Text continues the discussion on authoritarianism.]

한 공화국도 없다. 이념적인 이유로 최 교수...  
[Text continues the discussion on authoritarianism.]

한 공화국도 없다. 이념적인 이유로 최 교수...  
[Text continues the discussion on authoritarianism.]

### "사상논쟁은 지적 빈곤의 증거"



송국  
UCLA 한국연구중심장  
학장

송국은 1945년 11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UCLA 한국연구중심장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이 있다.

### 해의 학자 성명 요약

이름: 이만호, 최장집, 송국,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List of names and brief descriptions of their roles and affiliations.]

# 고대대학원신

창간일 : 1987년 10월 20일  
 발행인 : 고대대학원신문 편집위원회  
 편집인 : 강철 구  
 광고 및 제작 : 우리기획 (대) 283-2311

제 73 특집호

The Korea Graduate School News



## 『조선일보』가 노리는 건 최장집 개인이 아니다

### 자기 이름 파는데 혈안된 지식인들이 자제해야

강준만  
 전북대 신학부 교수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일관성도 없고 일관도 없다. 지식인들 상에서 남북분열을 다루는 것과 중공주의 차원에서 남북분열을 다루는 것의 차이를 인신 공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비롯하여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학제미충은 의외로 현실의 양상과 인신 공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를 비롯하여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학제미충은 의외로 현실의 양상과 인신 공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중공주의에 대해선 남북분열을 다루는 것의 차이를 인신 공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를 비롯하여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학제미충은 의외로 현실의 양상과 인신 공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알라스카리안 '사나이'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제 73 특집호

고대대학원신문

2 1988년 10월 31일 토요일

◇ 최장집 교수의 학문세계

## 현실에 대한 비판적 개혁주의의 입장을 견지 민주주의는 그의 영원한 화두이자 현실문제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 『朝月鮮』

美韓의 証照 原籍개발작가工作  
 高橋正典의 著  
 高橋正典의 著  
 高橋正典의 著

『朝月鮮』가 저명한 학자에 대해선 여기저기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서부적인 반박이 그 교수에게 의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일부 『조선일보』의 특기잡이를 통해 상당한 비난과 함께 다른 학자들에서 이야기해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무 정례기획위원장 최장 집 교수의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월간조선>과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문은 주로 하에 이 사회의 정치·학문·인론의 비문 존제방식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품게 한다.

우선 필요한 것은 최장집 위원장의 정치사상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요구하는 일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반성이다. 그러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토대의 취약성을 말하고, 기기에 상존하는 비민주적 원리주의의 위험을 말한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을 이루는 시민적 권리다. 물론 이것은 교과서적 이야기다. 생각하는 자유가 원천한 것이 못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릴 것을 가리도록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생각의 자유는 문화적·윤리적 통념과 관습의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법이 지기에 제재를 가한다. 이런 경우 최소한의 남득 기준은 법률적 한계나 문화적·윤리적 통념의 제약이 그런 나름으로 분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상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누구를 사상의 검증자가 하게 할 것인가?

민주사회의 생각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생각의 사실적 결과로

## 논단



김우창

고려대 교수  
영문학

인한 것이다. 그런 한도에서 생각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것도 실증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서만 그러하다. 공직자의 생각은 제한되거나 실현되는 정책으로 표현된다. 그때 그것은 분명하게 파져볼 수

## 민주사회의 사상과 정치

있는 현실적 대상이 된다.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만도, 정책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결과와 영향이 아니라, 정책 집행자나 수행자의 사상부터 파지고 든다면 어느 세월에 나라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급한 현실 속에서 동기와 사상을 묻고 놓아지는 것은 현인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그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필리베스터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

이누에 이데에이고 사상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기기에는 적절 한 환경과 조건이 함께해야 한다. 학문적 토의와 논쟁의 장소가 그런 공간의

지, 광고인지, 보도인지 알 수 없는 기사들을 마음껏 실는 우리 언론의 보도 행위를 보면 우리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일로 세계와 나라 안 정세의 경중에 관계 없이 지면을 마음껏 할애하는 신문의 힘 행사는 보편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주의 확신은 이해할 만한 것이 된다.

최장집 교수가 민주적 신념에 투철한 학자라는 것은 그의 지서를 널리 읽히는 사람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 맹신이 아니라 역사와 정치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뿌리박고, 그것에 의하여 유연하고 심세하게 조정·형성되는 신념이다. 사실을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관 속에서 분석·이해하려는 것이 그의 학문적 방법이다. 이것은 맹신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혹스러운 것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이지만, 진리의 방법이기도 하다. 사실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개방성 없이 진리는 근접될 수 없다. 최 교수의 사상을 문제삼는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의 고정된 관점에 서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대통령에게 하나의 주관적 관점으로 요란한 정보와 견해를 공급하려는 자문역이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되어 마땅한 일일 것이다.

한다. 생활 차원에서 논란의 궁극적 조장자는 법정이다. 민주적 법제도의 이념은 문제의 여러 면을 공평하게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보장하는 데 있다. 검사와 변호사의 대등한 관계는 그런 이념의 한 표현이다. 민주적

법제도가 "내가 네 죄를 알렸다"하고 피고를 올리대는 불간사회의 법정이나, 이상적 질차보다는 대중의 조작에 의존하는 인민재판에 비하여 월등하게 탁월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자유사회의 질서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나 논쟁과 재판의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곳이 대중인론 매체다. 이 지리에 서 논할 수 없지만 그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대신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엄격한 책임의식과 자기기용이다.

자기 회사의 일에 관계되는 한 선적인 있다면 이것은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언론기관이 실질적인 권력이 되어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시대에는 시민의 언론 감시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었다. 언론권력은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보다 더 은밀한 방식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시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왜곡보도를 자주 행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조선일보의 이번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에 대한 보도가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권위주의시대에서 우리 언론은 권력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왔고, 특히 조선일보의 정권권력의 재생산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서울신문 10월 29일자

### 특별기고

## 언론의 자유와 방종



文石南  
한국사회학회 회장

최근 한 유력 언론사의 崔草集교수에 대한 왜곡보도 문제로 지식인 사회가 매우 소란하다. 처음 월간 조선은 崔교수의 한국전쟁 관련 논문들을 거론하면서 논문에서 사용된 몇가지 개념과 문장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마치 崔교수가 한 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부인한 좌익 지식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崔교수 본인의 해명과 한국정치학회의 성명, 그리고 몇

있다면 이것은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언론기관이 실질적인 권력이 되어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시대에는 시민의 언론 감시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었다. 언론권력은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보다 더 은밀한 방식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시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왜곡보도를 자주 행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조선일보의 이번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에 대한 보도가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권위주의시대에서 우리 언론은 권력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왔고, 특히 조선일보의 정권권력의 재생산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 "언론 자유 보장돼야 하지만

### 왜곡보도는 규탄 받아야

### 길들여진 냉전적 시각

### 민족 미래위해 탈피를"

방종과 횡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권위주의시대에서 우리 언론은 권력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왔고, 특히 조선일보의 정권권력의 재생산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 <10월 29일자 '한겨레' 신말>

필자는 그동안 조선일보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측면들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번의 왜곡보도 사태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는 IMF사태를 극복하고, 21세기의 경쟁력을 갖춘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개혁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가 언론분야이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언론 개혁의 핵심은 흔히 생각하듯이 효율적 경영의 측면에서 행하는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간 길들여져온 냉전적 시각과 안하무인으로 군림하는 습성을 단정하게 벗겨내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민족언론을 자치해온 조선일보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민족의 장기적 이익에 반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일부 수구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옹호하는 것보다 발방진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족의 장래를 설계하려는 열린 자세가 아쉽다.

정권의 과잉

9년전 KBS에 (안타깝지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

최민기와 김성우

30일(토요일) 방송된 MBC의 '뉴스와 시사'에 최민기와 김성우가...

사상 유머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Table with 2 columns: 방송사, 시청률. Rows include KBS, MBC, SBS, EBS, YTN, etc.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 노릇의 자리는 6.25 남침을 북한 지도부가 믿...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극단적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 역할을 맡는다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프로듀서 권혁보

9년전 KBS에 (안타깝지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 역할을 맡는다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조선', 시대착오 '마녀사냥' 맞들렸나?



월간조선·조선일보가 최근 최장집 교수 고건대 정치외교학과 대우형 차...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월간조선 11월호, 최장집 교수 글 트집 '좌익' 매도 학술·언론·시민단체, '불공정 개혁 홈집내기' 경고

월간조선은 11월호 '민주주의·최장집 교수'의 송정호·김정환 연구 6·7호는 김일성...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이들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가시화되면서, 방송계가...

우리의 주장

# 빛나간 색깔시비

조선일보-최장집 교수 사태를 보며

학자 최장집이 아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최장집을 문제 삼은 월간조선 11월호를 두고 시끄럽다. 요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이념에 반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이 어찌 공직을 맡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최 위원장의 단호한 대응에 조선일보는 꽤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 사실은 그의 현대사 보기가 수정주의 사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듯한 누앙스를 풍기며, 학문의 자유가 있으면 언론의 자유도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각각의 반박성명을 조그맣게 전하는 '상의'는 그렇다치고, 어디에 있었는지 들도 보도 못한 단체들의 항의성명이라는 걸 시시콜콜 전하는 것은 보기에다 민망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조선일보사 주최의 '대한민국 50년-우리들의 이야기' 전시회 개막식에서 한 '공산주의자들의 극단적 반대를 물리치고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묘지의 처사를 들어 최 위원장의 시각이 김 대통령의 역사관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을 퍼는 데는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그간 조선일보가 술하게 제기해온 김 대통령에 대한 색깔시비는 어디로 갔는가. 그런 논리라면 최 위원장도 그 비슷하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공인의 학문적 성향을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고유업무이자 의무라는 주장을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공인당국의 수사 계획서이나 나올 만한 검증이라는 선택적 용어에서 우리는 선형적이 학문을 후시하는 듯한 사투 위압적인 자세를 발견한다. 실제 문제가 된 기사들은 조목조목 최 위원장의 죄를 추궁하는 듯한 무다. 언론이 건전한 문제제기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마당을 마련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나 표적을 정해 놓고 일방통행식으로 말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조선일보가 공인들에 대한 결재기관인가.

언론의 자유라는 방패를 내세워 최 위원장의 사상에 칼날을 들이대기에 앞서 조선일보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생각해야 했다. 스스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주요 언론사라면 그에 상응한 심사숙고는 당연한 것 아닌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 언론의 자유가 '비방의 자유'나 '회색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조선일보사의 자유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다른 모두를 재단하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특정 이데올로기의 어슬픈 잣대로 학술연구를 매도하며 저자를 천박화시킨 양 몰아붙이는 것은 거칠고 옹졸하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태도는 다원주의에 바탕한 자유민주사회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건전한 보수주의의 이념과도 한참 다르다.

유신과 군사독재시대를 지난한게 건넌 한국사회의 사상적 건장성을 과소평가할라. 그 치열했던 이념적 갈등과 일국의 부흥을 꾀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는 선행적 구호와 이분법적 논리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읽기에 더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다.

조선일보가 나라를 걱정하는 건 좋지만 그 방법의 정당성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 오만한 언론권력의 빨간물 들이기

언론이 정치권력을 공격하는 '오만한 권력'으로 성장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 대선에서 언권(言權) 선거로 정권을 재창출시킨 '김 목이 커' 구실 모본인가? 아니면 박정희 정권 때부터 권력의 품에 안긴 권언 유착에서 배태하기 시작한 것인가? 그도 아닌 문민정부 들어 퇴조하던 권부의 권위 탄자단을 투치했기 때문일까?

'극단적 사상검증'으로 권부를 치르고 있는 그들과 최장집 교수를 남다른 분노를 내뿜는다. 최근 한것 유명한진 9년 저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서다.

김영삼 정부 확대의 개혁입법이라고 할 리용실명제가 시행되자 이때부터 개혁에 저항하기 시작한 언론은, 대자본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개혁연합집선에 적대감을 띠는 구실을 한이념적 마찰과 권력화의 기반을 닦았다. 그 결과 6명의 신공안정부를 검열이 주도했다면, 문민정부의 그것은 이념공세를 퍼부은 언론이 주도했다.

당시 언론은 국가안보, 사법기구 안의 천거했던 최장집 보수그룹과 구체제의 핵심 보수그룹의 대변기구인 듯했고 마치 '냉전이며 무활하란, 군부권위주의와 다시 돌아오라'고 주술을 외는 것처럼 보였다. 낮은 수준의 사상과 낮은 수준의 철학적 개혁에 관한 한 언론은 개혁의 지지세력이나 개혁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심화되는 순간 언론은 완강한 저항세력의 본모습을 드러낸다.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 언론개혁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정치학자 최 보수가 주장한 언론개혁론의 핵심이다.

이런 그가 요즘 조선일보의 빨간물 들이기 명세의 첫 대상자로 목혀 앉혔던 민회(民會)를 당하고 있다. 권력화된 언론이 민주화의 열렬한 조력자는 현실도 참담한 일인 데 언론이 아직도 막강한 세도를 부리는 게 또 안타깝다.

이창섭 기자

가사경리보  
P. 11. 2

월간조선 '사상검열' 뭘 노리나  
어디 9월 1988. 11. 4

# "구보수여권 결집" 향후 입지 강화

## '특정인에 대한 공격' 해석은 강력 부인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위인과 용기를 현는 길이다.'

월간조선 11월호 광고문인의 한 귀월이다. 월간조선이 생각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과연 무엇이 위인이고 용기일까. 이는 월간조선 11월호 목차에서 금방 밝혀진다.

강경 문체를 비롯해 총총 수사 과정에서 돌출된 고문 시비, 부산 민선 기행, 여기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단석홍이던 이기택 전 의원의 명예훼손의 인턴부 기자가 실렸다. 특히 부산 민선 기행의 경우 부산의 풍경을 마치 '폭풍 전야'로 묘사하기도 했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조선일보가 월간조선용 통해 현 정권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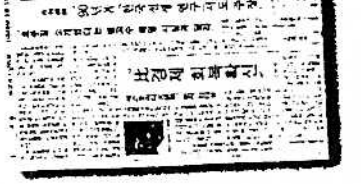
이들 감탄한다면 월간조선이 실정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분명해진다. 민DI 상황에 힘지한 반공의식, 그리고 개혁세력에 대한 거부감, 결국 구어권보수 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이런 점에서 월간조선은 이들의 대변자 역할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향점의 정점에는 단연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검열이 자리를 잡고 있다. 월간조선 스스로도 시인했듯이 이 기사는 상당한 '파문'을 불렀고 있다. 월간조선의 표현에 따르면 '김대중 위원장으로서, 월간조선의 표현에 따르면 '김대중의 핵심 프레임 중의 한면'인 최위원장이 '좌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을 선언했고 시민단체와 우

확산되고 여기에 현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 반영 등 주변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자 이에 대한 견제용으로 내 놓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의 '성명서' 식의 대응 전략이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한게 조선일보의 영향력 제고도 무시 못할 배경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 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필두로 일부 인사에 대해 조선일보측이 분명한 '비토권'을 행사했음에도 이에 대한 소구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월간조선에 의해 촉박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월간조선에 의해 촉박될 최 교수 등에 대한 사상 시비는 부가적으로 범 보수세력의 결집력을 보다 강화시킬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정국 구도속에서 조선일보의 입지를 한층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월간조선측은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인신공격'이란 해석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월간조선측은 '최 교수가 '제각각 운동'에 핵심적으로 관련고 있는 대법원 지문위의 핵심 공인'이라며 '그의 역사관과 국가관, 대법관을 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는 근거한다면 조선일보측의 사상 검증을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월간조선이 11월호에 실었던 최장집 교수의 '국가안보'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한 면. (조선일보 제공)

이 없지 않다. 벌써부터 비교수 등 일부 학자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한해 청와대측은 "최 교수 저서에 대해 추모반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선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초기에 조선일보의 보도를 '격하'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시간이 갈수록 '초기수습'에 무게를 두고 '확전'을 애써 피하는 모습 보인다. '개인적 문제'로 국한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조선일보의 향후 논지가 국정 운영에 부합이 되는 것을 애써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월간조선의 사상 검증 파문의 귀추는 주목거리이다. 월간조선에 비하면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논리가 제외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정치적 공세'에 머물지 않고 사회전체의 보수화와 개혁세력의 위축으로 연결될 소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같은 논리는 정부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조선

정체기회수석을 필두로 일부 인사에 대해 조선일보측이 분명한 '비토권'을 행사했음에도 이에 대한 소구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월간조선에 의해 촉박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월간조선에 의해 촉박될 최 교수 등에 대한 사상 시비는 부가적으로 범 보수세력의 결집력을 보다 강화시킬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정국 구도속에서 조선일보의 입지를 한층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월간조선측은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인신공격'이란 해석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월간조선측은 '최 교수가 '제각각 운동'에 핵심적으로 관련고 있는 대법원 지문위의 핵심 공인'이라며 '그의 역사관과 국가관, 대법관을 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는 근거한다면 조선일보측의 사상 검증을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 '전체주의 언론'을 경계한때

**조선일보의 극단적 사상검증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하는 또다른 파시즘**

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그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가, 타당한가, 진실한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가 등을 따지는 일은 정지나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권장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필자의 시기가 나 사상이 자신의 것과 다르다고 매도하는 행위는 마땅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위배되는 위헌행위이다.

본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비롯하여 어떤 사상을 일가치더라도 폭력혁명이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관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을 보는 눈이 약간 진보적인 것을 관용하지 못하고 매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온한 처사일 뿐이다.

전체주의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스탈리니즘과 함께 파시즘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언론이 파시즘의 혐의가 있을 경우는 더욱더 경계해야 한다. 언론은 사회의 양심선이 크고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도 아주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와 시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원만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파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런 언론이 그런 성향에 근거해서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일삼으면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남에게 자기 사상을

김요하에 전체주의를 조장할 때는 더욱더 교활하다

자신의 사상의 한 극단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 가까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존재들을 모두 사상의 다른 극단에 서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래서 사상검증이라는 구실로 진북이나 좌익으로 낙인찍는 사상공세를 일삼아 무고한 사람들을 매장하는 전체주의적 언론이 있다면 그런 언론이야말로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느 틈엔가 그 언론이 진과 하는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에 지배되고 말 것이다. 북한의 스탈리니즘적 전체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파시즘적 전체주의를 허용할 수는 없다. 역사가 증거하듯이, 전체주의를 이기는 길은 또 하나의 전체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의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10월 10일

10월 10일

'인보를 추구해 <조선일보>의 판매가 높아졌다'면 오히려 자랑이다. <월간조선> 편집장이 어느 주간지와 행한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낸 조선일보의 국가인보 상업주의관이다.

최근 조선일보의 회장님 교수 사상 검증 공세는 겉으로 공적 인물에 대한 사회적 비판 보도라는 핑계를 쓰고 진행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본질이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세 스페인과 프랑스의 종교재판을 대신하여 지금 조선일보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검증 심판기구로 자처하고 나선 게 아닌가 하는 답혹감마저 든다. 언론기관의 이런 보도자세가 더이상 제동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한마디로 저쪽 사회의 인민제관과 조공도 다를 바 없으며, 여론들이 대중 신동의 사태로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특정 신문의 이념색깔을 두고 시비를 따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 권력의 핵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언론들은 독자만을 무차별 공격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상을 유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면에서 막강

## 언론비평



주 동 황  
평문대 교수  
인문학

한 언론기관이 사상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다른 가해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다. 또 보수층 독자의 신장적 인기 에 관용하려고 하는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 신문의 논조를 국가인보 상업주의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이 나오는 조선일보의 태도에는 무언가 내부적으로 크나큰 고립감과 위기감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 불안감은 바로 무너져내리는 독자시장을 지키며 살아 남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보수적 이념을 계속 사회적 의제로 삼아 자신의 입

##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

정한 의도는 정치적 이념적 목표 달성보다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위기상황에 대한 절박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체의 본질은 사상검증 공세가 지난번 이승복 오보 시비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두 시건의 보도에서 무모할 정도로 모든 것을 덮어지고 뒤

지를 간지해야 한다는 질박한 목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50대 이상의 보수적 독자에게 주된 기반을 두고 있다. 정권 교체로 조선일보의 보호막이던 기독교층이 권력을 잃음에 따라 정·관계의 고급정보원과 친밀되었고, 지금까지 빛나는(?) 독자들의 기전이 사라졌다. 그 결과 지역과 뉴스는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독물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보수적인 논조 때문에 젊은 독자들이 형성되지 않고 중장년 독자층은 줄어들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수적 논조는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적 주·월간지의 표적이 되 있다. 또한 현정권의 햇볕정책에 따라 남북경협이 진전되고 금강산 개발 등 대북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자신의 보수 이념 바탕이 외부로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일보가 최근 일련의 보도를 통하여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급격한 이념 논쟁의 진행과 더불어 보수적 독자층 확보라는 반사이익일 수 있다.

한편, 다행스러운 점은 무엇보다 과거 조선일보의 정치적 이념적 논조를 자주 받아왔던 다른 일간지들이 조선일보의 이념적 립지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옛 야당 등 보수적 정치권이 보이는 신중한 자세도 조선일보의 기내를 허용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극단적 이념 공세에 맞설 방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김대통령 잘하고 있지만 주변에 분홍색 사람들이 문제”

김총리, 최장집교수 관련 “이해할수 없는 발상”

김종필 국무총리는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장집 교수의 사상 문제와 관련해 “2년 반 동안 김 대통령과 공조를 해왔는데 다스린 진보적이지만 나 같은 보수주의자가 절충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그런데 주변에서 연하는 사람들과 분홍색 사람들이 문제”라며 “(최 교수는) 저쪽(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나는 참전했던 사람으로서 이해할수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원문을 구해 읽어봤는데 학구적이거나 학문적이라고 하기에는 벗어나 있더라”며 “조선일보

앞에서 데모를 했다는 데 학문의 자유라고 한다면 데모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해 “대통령 주변”에 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다”고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명했다.

김 총리는 이밖에 “다음 총선 뒤에 는 다수당이 책임지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내각제 개헌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총리는 이어 “사람은 신이 아니라 욕심이 많으니까 두고 봐야 된다”고 김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성현용 기자

7월 9일 화요일

# 조선일보 ‘최장집교수 보도’ 교수4명중 3명 “잘못된 분석”

정치적도 짙린 이념공세 27.5%-학문자유 침해 22.5%

## 교수신문 설문조사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의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보도에 대해 대학교수 4명 가운데 3명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치로 발행된 〈교수신문〉(발행인 이영수·격주간)은 월간조선의 최 교수 ‘사상검증’ 보도 이후 전국 인문사회과학 교수 8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은 대상자들(대학연감)에서 무작위로 뽑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선일보 보도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75.1%의 교수들이 ‘의도적 왜곡’(33.8%) 혹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분석’(41.3%)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답은 5.0%에 불과했다. 또 10.0%는 ‘부분적으로 잘못됐으나 전

체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응답했다고 교수신문은 분석했다.

교수신문은 조선일보 논외의 순수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50%의 교수들이 정치적 의도가 짙린 이념공세(27.5%)거나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22.5%)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조선일보가 제기하는 문제가 할애하는 지면의 양이나 논조에 상응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30.0%), ‘중요하다’(23.8%)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학자로서 공인의 사상·학문적 자유는 어떠한가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7.5%의 교수들이 ‘공인이기에 앞서 학자이기에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이기에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유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5.0%였다. 김보근 기자

# 편견 안경신, 공이점등, 언론의 횡포

전체 맥락 무시한 일방매도 언론윤리 벗어나 열린사회 가는 진통기... ‘진정한 보수’ 절실



백은영, 김대중, 김홍도

백은영-김대중은 8월 8일 서울에서 열린 ‘8월 8일’ 기념식에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신문의 남은논리로 한 학자를 지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백은영-김대중은 8월 8일 서울에서 열린 ‘8월 8일’ 기념식에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신문의 남은논리로 한 학자를 지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공기를 지지하는 신문이 남은논리로 한 학자를 지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연 최용 김보리집과 있으나 공무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격렷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름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최담 최장집교수 논문 《월간조선》 시각 어둡게 볼 것인가

최담 최장집교수 논문 《월간조선》 시각 어둡게 볼 것인가

최담 최장집교수 논문 《월간조선》 시각 어둡게 볼 것인가

최담 최장집교수 논문 《월간조선》 시각 어둡게 볼 것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절대 불가침의 원칙이다.’

‘최장집교수의 논문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최장집교수의 논문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백은영-김대중은 8월 8일 서울에서 열린 ‘8월 8일’ 기념식에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신문의 남은논리로 한 학자를 지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백은영-김대중은 8월 8일 서울에서 열린 ‘8월 8일’ 기념식에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신문의 남은논리로 한 학자를 지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백은영-김대중은 8월 8일 서울에서 열린 ‘8월 8일’ 기념식에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신문의 남은논리로 한 학자를 지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백은영-김대중은 8월 8일 서울에서 열린 ‘8월 8일’ 기념식에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신문의 남은논리로 한 학자를 지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백은영-김대중은 8월 8일 서울에서 열린 ‘8월 8일’ 기념식에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신문의 남은논리로 한 학자를 지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백은영-김대중은 8월 8일 서울에서 열린 ‘8월 8일’ 기념식에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신문의 남은논리로 한 학자를 지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崔章集교수 논문』紙上논쟁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며 『최장집』(최장집)고려대학교수인 박태환(최장집)의 논문은 『崔章集교수 논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은 '월간조선' 11월호가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최장집 교수와 송석적 6.25전쟁관 연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비롯된다. 월간조선이 특이 문제를 삼은 것은崔章集이 지난 90년 편집한 '한국전쟁연구' (태환)라는 논문집에

실은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라는崔章集 교수 자신의 논문 '崔章集은 지난 96년 1월 17일 저서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에 이 논문을 일부 용어수정을 제외하고는 문맥의 변화없이 '한국전쟁의 한 해석'이란 제목으로 재수록했다.

월간조선은 11월호에서 "崔章集이 위의 논문에서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란 표현은 민족해방전쟁' 표현은 가급적 사내' '6.25의 최대 희생자는 북한민중'이라

는 등 6.25전쟁을 평가함에 있어 대한민국에는 불리하게, 북한에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이 확인되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崔章集은 "바로 일본 장에서 '역사적 결단'이 으르며 불쾌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에도 월간조선은 앞뒤 문장을 거꾸로 뒤집어 논문을 가지고 있는 취지를 왜곡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반론 보도, 청구 소송 및 월간

조선 11월호의 '박태환'이崔章集의 논문을 지면에 실었다.崔章集 교수는 '한국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일보측은崔章集이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공적지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이번 논쟁은 해외 학계와 학자들도 포함해 국내외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참가해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번 논쟁에 대한 학계의 두 시각을 들어 본다.

<崔永福기자>

데스크 칼럼

김지석 매체부장 겸 여론특자팀장



영어로 'tilting at windmills'라는 표현이 있다. 직역하면 '풍차를 찌르다' '풍차와 싸우다' 라는 뜻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가공의 적과 싸우다' 라고 나온다.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하고 싸운 데서 유래한 이 말은 당연히 '시대착오적'이라는 의미를 깔고 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쓴 세르반테스는 16세기 중반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중세 봉건질서가 국민국가에 자리를 물려주고, 봉건제의 꽃이었던 기사제도 보병·공수 부대로 바뀌던 때다. 허구의 산물 이면서도 인기상품의 하나였던 마녀도 사라지는 중이었다. 돈키호테는 이 근대의 첫자락에서 중세의 꿈을 꾸던 사람이다. 기사에게 요구되는 열정과 용기, 낭만 등을 모두 갖췄지만 불행하게도 가장 중요한, 물리쳐야 할 적이 없었다. 이런 돈키호테의 염원이 어둠과 배회되면서 풍차는 괴물이 되어버리고만다.

최근 조선일보사가 최장집 교수에 대해 퍼

와 행동에 족쇄를 채우고, 시계를 되돌려 지난 시절의 사상통제 분위기를 오늘에 되살릴 수도 있다.

조선일보사가 최 교수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도 이상한 말이다.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조선일보사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도 '검증' 받은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개별 언론사는 공인의 사상에 대해 '문제 제기' 할 뿐이고, 검증은 국민의 합법적인 대리권자나 시민사회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되풀이해서 사상검증이란 용어를 쓰는 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 보수단체가 그랬던 것처럼 사상검증이란 말이 가지는 자국적인 효과를 활용·전파하려는 의도와 함께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최종 판단까지한다는 유사 권력기관의 오만함이 배어 있다.

지난달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이던 박갑철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체육특기생 부정입

'6.25' 수정주의적 해석 국론분열 초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며 『최장집』(최장집)고려대학교수인 박태환(최장집)의 논문은 『崔章集교수 논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은 '월간조선' 11월호가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최장집 교수와 송석적 6.25전쟁관 연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비롯된다. 월간조선이 특이 문제를 삼은 것은崔章集이 지난 90년 편집한 '한국전쟁연구' (태환)라는 논문집에



<단국대학교수 정치학>

실은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라는崔章集 교수 자신의 논문 '崔章集은 지난 96년 1월 17일 저서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에 이 논문을 일부 용어수정을 제외하고는 문맥의 변화없이 '한국전쟁의 한 해석'이란 제목으로 재수록했다.

월간조선은 11월호에서 "崔章集이 위의 논문에서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란 표현은 민족해방전쟁' 표현은 가급적 사내' '6.25의 최대 희생자는 북한민중'이라

'민족해방전쟁' 표현은 단면적 설명일뿐

영인검증 문제를 놓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논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획일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崔章集(최장집)교수가 공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검증당한다는 데 견해를 달리 할 사람은 없다. 재도상의 미비로 인해 사전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후에도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검증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또 필요한 일이지조차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누구나 수긍할만한 기준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따른다. 공인검증의 기준이 객관성을 띠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대상의 신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이는 당사자와 영예는 물론 검증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잘못된 검증은 자의적인 권력 못지않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경남대학교수 정치학>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인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은 학문세계 전반 또는 사상세계 전면에 대한 통찰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만을 떼어내서 검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 시기의 특정 논문, 그리고 그것도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이나 특정 단어가 분석의 기준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감화와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는崔章集교수의 저서는 정반대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역사적 결단'이라는 용어도 전후의 문맥에 의하면 송석적(김일성)이 남침이라는 오해를 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말도 전쟁의 계기적이고 부분적인 단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전쟁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식의 검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검증의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확성이 결여된다면 이는 검증이 아니라 또 하나의 폭력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崔章集교수의 '한국전쟁의 한 해석'은 80년대 지성계층이 주도했던 수정주의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집필된, 한국전쟁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글이다. 이 과정에서 학문적인 발전과 성숙으로 과거의 글 중에서 일부 용어나 문장이 바뀔 수도 있으며 또 보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글은 전통주의적인 시각과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뛰어넘는 자세로 현대구조의 국력과 민족통일의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전통주의적인 해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리고 수정주의의 내용을 소개했다고 해서, 이를 수정주의의 옹호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정확한 검증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검증의 대상 또한 엄밀히 구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대상은 교수로서의 송석적보다는 공인으로서의 송석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로서의 송석적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공인의 신분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자문에 임할 때,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지적 비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수로서 집필했던 논문과 일부를 들어 그 부분이 공적에 임하는 자세와 소신에 그대로 반영되리라는 예단에서 비판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논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자의적으로 추리된 문장이나 단어를 검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崔章集교수의 학문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논지와 공인으로서의 언행과 소신, 그리고 이에 따라 일어난 제반 정책을 검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1월에는 다양한 사고와 행동이 질서있게 요구되는 지식정보사과를 들고 있다. 정확성이 결여된다면 이는 검증이 아니라 또 하나의 폭력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崔章集교수의 '한국전쟁의 한 해석'은 80년대 지성계층이 주도했던 수정주의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집필된, 한국전쟁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글이다. 이 과정에서 학문적인 발전과 성숙으로 과거의 글 중에서 일부 용어나 문장이 바뀔 수도 있으며 또 보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글은 전통주의적인 시각과 수정주의적인

풍차 찌르기

고 있는 사상공세는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지면에는 뭔가 이뤄내려는 나름대로의 열정과 용기가 엿보인다. '하면 된다'는 낭만도 느껴진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이름은 길고 그럴 듯 하지만 별 실권은 없을 것같은 최 교수, 국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인물로 만들어 공격하는 것도 비슷하다. 냉전시대 이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적 세계관의 회복을 꿈꾸는 것도 비교가 된다.

물론 겉보기의 비슷함 뒤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먼저 돈키호테가 가졌음직한 순수한 정의감이 감지되지 않고 의도성이 짙게 드러난다. 돈키호테는 기사도를 직접 실천해보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 기사도로 맨스의 재미있는 풍자물일 뿐이다. 이번 사상공세의 경우는 다르다. 현 정부가 어렵게 유지해나가고 있는 개혁정책의 폭을 좁힐 수도 있고, 때아닌 내각제 개헌 추진 움직임과 연결돼 개혁정국의 방향을 틀러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한 정치학자의 사고

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 중에는 조선일보사 문화사업국장으로 재직중이던 96년에 신문사 사무실에서 5천만원의 돈을 훔쳐 갔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검증'은 이런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점검하는 종류의 것이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박씨의 구속을 막기 위해 다차원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언론활동과 관련된 사안도 아닌 파렴치범에 대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떠돌았다고 한다. 더욱이 조선일보사는 군사정권 때는 차치하고라도, 문민정권 당시 김현철씨가 무대의 뒤에서 극정을 농단해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고갈 때도 그를 '검증' 하겠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

역사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풍차를 찌르기 전에 최소한 두가지는 해야 한다. 우선 눈을 맑게 닦아 허상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좋다. 사족을 붙인다면 풍차를 찌른 뒤 마녀라고 하는 일은 더욱더 없어야 한다.

문화일보, 11.19

최장집 교수의 사상 검증, 무엇이 문제인가

1950년대 미국 시대에 공중신문을 일으켰던 '메카니의 기행'은 위스키 한 병만 들어 있었다. '김형민 참언'은 현대사학계에서 '최장집 교수의 사상'이라는 말을 듣고 웅크리고 있다. 미국 공중신문의 편집과 영인이 들어있을 줄 알았던 메카니의 기행에는 장차 출판해야 할 한 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장집 교수의 편지집이 본래는 그 어떠한 진정성이 없지 않다. 세계가 점점 더 다문화화 가는 시점에서 볼 때, 이번 시민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본지는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시민을 대상으로 최장집 교수의 사상, 언론의 자유, 언론의 역할, 보도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 월간조선의 사상사비, 지식계가 왜 주목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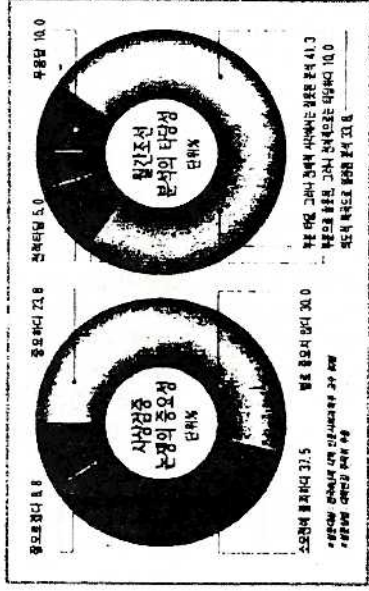
학문 자유 침해한 '왜곡'...쟁론화될 구조차 없어

최장집 교수의 사상 검증, 무엇이 문제인가

최장집 교수의 사상사비, 지식계가 왜 주목하나

이들은 모두 최 교수의 논문 중 특정 문구를 채택한 것. 이러한 제약을 들 일삼지만, 일각 보아도 최 교수는 좌파적 사관을 가진 친북 인사처럼 보인다. 지난 28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노동일 국민일보 연구위원의 칼럼은 이에 대해 명쾌한 논리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최 장집 교수의 이 같은 보도는 "알 바 없는 엉터리한 기사를 드러내어 논증하는 '강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도적으로 남의 길을 인용하거나 전체 중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망각의 힘이 무섭다지만 기억의 힘 또한 냉혹한 법.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불과 1여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 '월간조선' (7년 7·9월호)은 이창희, 한국외대 교수(법학과)의 저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 출판사 편을 문제삼았고, 공판은 결국 법정으로부터 옮겨졌다. 더 목이 이 교수의 이 책은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참고도서로 출판된 것이어서 조선일보사의 왜곡 보도에 의구심을 더했다. 그 외에도 한양상 진 흥 임원장관(월간조선' 93년 8월호)을 감장난 진 청와대 교문·사회수석비서관(월간조선' 94년 6월호)의 사상



답변한 교수가 22.5%가 조선일보사의 사상 검증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적 풍토는 허약하기만 하다. 남은 흑백논리에 물들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아직도 꼬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 결핵을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세계가 점점 더 다문화화 가고 있는 터에, 한국 사회는 오히려 철문을 굳게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화미하지만, 한 줄기 낙관을 점치는 것은, 67.5%의 지성들이 이 문제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나라는 데 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사실, 최 교수의 이번 사상 검증 논쟁은 애초에 광론화될 가치조차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김문경 기자>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20.0%. '학리적 입장과 공인의 입장을 엄격히 구분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은 8.8%를 차지했다. 공정과 유보의 반등이 거의 빈번으로 엮여진 이 문제는, 우리 학계가 공인의 사상적 자유에 대해 여전히 가지런한 혼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개별의 시와 집단의 사의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72.5%의 교수들이 화계 및 진보세력이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의 손을 들었다. 조선일보사가 단순히 개인의 사관을 문제삼는 것은 이 나라는 해악이다.

재의 한인화자들에게까지 여파가 확산된 이 사안은 몇 가지 경향들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주요한 학의 불공공이다. 언론의 검증, 문제 문과 사상의 자유, 공인의 검증, 문제 등 최 교수의 사상 논쟁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적 풍토는 허약하기만 하다. 남은 흑백논리에 물들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아직도 꼬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 결핵을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세계가 점점 더 다문화화 가고 있는 터에, 한국 사회는 오히려 철문을 굳게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화미하지만, 한 줄기 낙관을 점치는 것은, 67.5%의 지성들이 이 문제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나라는 데 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사실, 최 교수의 이번 사상 검증 논쟁은 애초에 광론화될 가치조차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김문경 기자>

● 학문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

'학계의 대처'가 절실한 때



김준필 서울대 사회학과 석좌교수

우리가 80년대 초반에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학계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이 절실한 때였다. 학계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이 절실한 때였다.

1996년 10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학계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는 '학계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학계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진보적 성향과 그 실천

언론 세계에서 80년대 연방적 사회운동에 반동해서 90년대의 와서 스스로 한국사회의 진리를 '시민사회'로 규정하고, 그 지향성과 최후적으로 스스로 연신을 할 수 없었다. 그 단결이 저를 '조선일보'가 최장집 교수에 대해 이념적 편견을 자랑하고 나서 무모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지만, 민주와 자유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다소 진취적인 신문사를 만들기도 하고 언론방송계의 스스로 성찰하는 기구가 생기기도 하고 노동조합이 설립과 재강화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우주(조선문)는 재빨리 소유의 거나 거의 재빨리 있다와 언론계로서의 정권과의 유착에 의해 상연주의를 지향하게 추후하는 동시에 권위적 관안추수적 이념을 무기 명제를 과한 성향을 과하게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민족적 시민사회건설이라는 명목으로 민족적 모순적 성향이 부유하는 기류가 발전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상연주의와 관안주의가 합쳐진 '안보상업주의'라는 지칭까지 받으며 비판 당하고 있다. 언론역사는 가장 조심해야 할 개인에 대한 기본권조차 침해하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본권 보장과 학계의 발전

이러한 사태의 변화는 사회과학 전반에 광범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의 자유는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연구의 대상이 객관적 있고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자유는 그만큼 어떤 종류의 이데올로기든 보편적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는 학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반해서 또한 서민층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우리 사회를 80년대를 지나서 현실이 느꼈던 것이 그 이유이다. 학문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은 학문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은 학문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은 학문의 자유와 정치적 실천을 수반하는 것이다.

학문의 자유를 이론적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학술운동 현장에서도 열망하게 헌신한 최장집 교수가 언론권리와 재후계제를 맺고 있는 데 대해 그의 정치적 실천이 아직 처음으로 진화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번 '조선일보'의 이데올로기 명제를 최 교수 개인에 대한 문제 차원이 아니고 그의 정권참여와는 관계없이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차원에서 학계는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현대사학에 대한 열정적 접근이 앞으로 우리가 열망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자율적인 역사적·문화적 바탕에서 '진지'구적으로 한국 민족의 생존과 성장의 길을 나가고자 하는 의 열망과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진보적인 성향의 발현이 있어야 학문이 실천적 열매와 함께 발전할 수 있듯이, 언론도 스스로 성장전환하지 못하고 결속된 이데올로기화된 언론이 간혹있다면 도태된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시민은 민중은 세대를 지나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 조선일보의 사상논쟁과 신정권 개혁의 진로

흑백논리에 바탕한 극우보수주의의 표출... 개혁의 발목잡기



이심성 가톨릭대-국제학부

이 있다 고 보는가, 북 한을 '정부' 로 볼 수 있 는가, 또는 해방 직후의 건국준비위 인회와 인민 공화국이 조 금이라도 공 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 가라는 등의 몇 가지 시험문제를 내 놓았다. 하지만 하며금 그 문제들에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조곰이라도 공 정적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 의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 가는 전형적인 사상검사의 전략을 구 사했다. 그런 식으로 임종된 사상문 제가 있으면 광인의 위치에서 숙청되 어야 한다는 논리도 그들이 비판하는 공산당과 빼놓았다. 마흔여덟살이 'OX' 식의 단순논리와 흑백논리의

이런 조선일보가 고려대 최집 교수를 상대로 전개한 이른바 '사상검 증'은 조선일보가 과거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하에서 지켜온 공인정사 역할을 재연한 것이다. 그것은 일은 '사상검토'라는 이름 아래 공산당들이 아니라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 생시절 받은 반공교육의 일부였다. 그러나 자라면서 우리들은 그것이 공 신당 이전에 우리 사회를 포괄한 과 시들을 담은 사회에서 불상 있는 일 인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 순히 인본이라는 가치를 자처하게 강요 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민주 주의의 기초인 사상과 학문의 자율성 을 두려워하는 독재정치 하 기독교 세력들의 관행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 었다.

조선일보의 이른바 공격적 '사상검 증'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두드러진 다. 하나는 흑백논리의 단순성이다. '월간조선'은 최 교수와의 인터뷰에 서 반만장부도 한국전쟁 발발에 책임

극복을 목표로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조선일보 사상논쟁의 단순성은 위험 하기 이를 데 없다.

조선일보의 사상논쟁 형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스탈린주의를 거꾸로 배 다박은 반공국가지상주의, 그리고 그 것이 내포한 역사주의적 진민성과 과격성이다. 그것은 극우 보수주의의 진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한 국사회 극우 보수주의의 이념적 성격 은 파시즘적 권위주의와 연결된 역사 성주의에 있다. 그것은 한국 보수인 본기관의 몰락 토대인 친미보수주의 의 진통과 닿아있다. '월간조선'은 용어까지 과감히 동원하는 조선일보 식 '단순무식'의 전술은 보수인론의 송길 수 없는 태생적 한계. 그 친민 성과 역사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하에서 이 인물기간이 가졌던 습관의 연장하면서 동시에 장권교과라는 새

능성도 철저하게 파괴했다. 그것은 북이 3당 합당 이후 조어진 김영삼 씨 와 조선일보의 밀월관계를 배경으로 조선일보가 김영삼 정권 내 개혁세력 김철이기에 성공한 것을 의미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는 김영삼이 다른 고 또 달린 대응해야 한다. 김영삼 정권 때와는 매우 다른 국내외적 상 황에서도 김대중 정권이 조선일보의 장권 김철이기에 무력하게 굴복하고 만다면 신정권 역시 김영삼 정권의 때처럼 廉政의 진철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정권 하에서 의미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신정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다. 현 장권을 재발하고 있는 정치자 기조의 핵심은 김대중의 존재와 신 정권 개혁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 민 진반이 일개 모르게 느끼고 있는 보수와 개혁간의 팽팽한 긴장이다. 침묵한 다수가 일부 살만하면서도 신 정권에 보내는 말없는 성원이 보수세 려의 소란한 저항을 견제하면서 신정 권을 떠받치고 있다. 그 기대와 성원 이 무너질 때 신정권의 정치적 생명 력 역시 고갈되고 말 것이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인론의 사회적 책임

“보수언론의 의도적 왜곡”...



한 목소리 질타

최집 교수 사상시비에 대한 학계반응

'월간조선'이 제기한 최집진 고려대 교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의 위원장)의 사 상 시비논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한국정치학회(회장 박영철 진 국대 교수)가 '월간조선' 보도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민교 협, 학술단체협의회가 참여한다.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최 교수 의 현태시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왜곡보 도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들도 지난 달 27일 비만 성명서를 발표하 는 등, 최 교수의 사상검증 문제를 놓고 이 들의 공동된 목소리는, 문세가 된 '월 간조선'의 기사가 최 교수의 저술을 전체 백락과는 상관없이 특정 단어의 자구를 신 태함으로써 왜곡 보도하고 있다는 것. 즉, 최 교수의 사상을 주관적 잣대에 따라 재단 해 최 교수가 미지 차파적 성향을 가진 초 복인사인 것처럼 몰고가고 있다는 데 그 우 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와 발단은 '월간조선'이 11월호에서 '최집진 교수'의 홍각적 한국전쟁관'이란 지

목의 기사를 실으면서부터. 이에 최 교수는 지난 28일 조선일보시사를 상대로 '자신이 저 술한 논문내용을 2차대에 걸쳐 왜곡, 필자의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명예 를 훼손했다'며 5억원의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 법에 제출했다. 지난 2월 토론회에서 순호실 사강대 교수 (정치외교학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 사태를 분석하고 있다. 순 교수는 이번 사 대가 "왜곡보도"의 문제,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문제, "공직자의 검증" 문제 등 다중적인 면들이 충돌하는 복잡한 사안' 이라고 지적하면서, "언론의 자유기 왜곡이 나 오보의 자유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한 합정에 한국언론학회(성규관대 신문발 송학과)은 "조선일보사가 최 교수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은, 최 교수 개인의 사관을 문 제삼는 것이 아니라 개혁세력에 대한 도전" 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4년제 대학 88명의 언론사회과학지 들을 대상으로 한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조 신일보의 보도에 대해 75%의 교수들이 '잘 못된 분석'이라고 답함으로써, 조선일보사 의 편향 보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5면)

최 교수의 사상 시비 논쟁이 개혁이 경 로되고 있는 시점에 불거져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파장이 아마 쉽게 멈추 지는 않을 것 같다. <김윤경 기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한 점에 서 지난 10월25일 한국정치학회기 상임이 사회를 열고 최교수 문제를 대하여 학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의 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학회는 성명서에서 문제의 기사는 부당한 왜곡에 바탕 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지적-이 념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학문의 자유 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회과학 불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따라서 많은 수의 보수적 성향의 학자들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정치학회에서 다양한 학문적 논의의 불기문하는 왜곡보도에 대해 한 목 소리를 냈다는 사실은 한국의 학계가 생 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 여진다.

한 사회 내에서 학계의 언론계는 각기 맡고있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모두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집 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학계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듯이 언론인에 의한 왜곡된 보 도 또한 용납될 수 없다. 불행히도 한 국의 언론은 그동안 사회발전이 많은 공 한을 해왔다는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무 소불위의 권력기구로 자리잡아 자신이 저 지른 과오와 때때로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었다.

구태의연한 매커니즘이 마녀사냥을 연상 케 하는 금번 최 교수 사건을 보면서 언 론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다시금 재고하 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사회개혁을 통해 자기 의 발전을 마련해야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이때를 무기 대립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재외 길 모색해야 하는 이 시점 에 구시대적 잣대를 가지고 편을 가르는 작태는 이제 그만 뒤야 할 때다.

최집진 교수에 대한 월간조선 및 조선일보 의 왜곡보도를 보는 학 문공동체의 입장은 매 우 착실하다. 왜냐하면 세계가 진부 변화하고 있 는데 우리는 아직도 냉전시대 극우 이념 의 용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월간조선의 사상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93년 한양상 교수에게도 가해졌던 구태의 재연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9년 전과 달랐던 것이 있다면 과거의 그것은 사회화에서 발간된 문제의 책에 사회학 회으로서 관두는 문은 손 사신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다소 단순한 방법의 동 원된 데 비해, 이번에는 최교수의 글에서 사용되던 어휘들과 문장을 의도적으로 문맥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용함으로써 논 의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는 점이다.

민립 한국사회에서 미강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언론이 한 학자의 학문적 견해를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념적 편가르기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 것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일일 뿐 만이 아니라 국권을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한국사회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데 걸 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가 주장한 것처럼 사상의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사상의 '왜곡'에 있다. 민주인론의 본 질은 사상의 보도에 기초하고 있다는 진 리를 받아들이면 사상을 왜곡한 해당언 론은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소수의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를 말고는 일부 언론과 극우 보수진단들이 자행해온 이념적 장담주의 와 이념적 선정주의의 폐해에 대해 다소



말 한마디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새 세대를 위해 모두 다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지금, 20세기 가 넘겨 놓은 온갖 모순·갈등·대립을 청산하기 위해 발맞추어 머리를 맞대고 화해와 통합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사회·문화·이념적인 다양성이 굳이 포스트모던의 이름으로 예찬될 필요는 없다. 허다도 우리 사회의 긴장감과 창조성의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공히 인정되고 있는 지금, 우리 앞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지극히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여 우리를 슬프게 한다.

비로소 신문사가 어떤 개혁적인 자유주의자를 향해 '사상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무모하게 벌인 이념적 재단이 그것이 아니고 이분법적인 구분된 이데올로기란 개혁에 저항하는 상습적인 사상공세. 민중분단의 틈새에서 자본의 이윤을 유감없이 차지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논리상의 오류가 눈에 거시처럼 걸린다. 도대체 검증이란 말의 뜻을 몰바로 아는지 의심스럽다.

검증이란 말을 (원래)사면에서 찾아보면,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의 뜻을 지닌다. 과학이론·사상·이데올로기처럼 어느 정도 추상성을 띠고 있는 주장들의 경우 그것들이 한층 더 확실하게 검증됨을 먼저 이끌어 내고 증명할 것이다. 한마디로 검증이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주장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그 정당성이 검증된 이론이나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이 어려운 도박사기에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어떤 이론 또는 사상이 진정으로 합속하지 않는 부분들을 근거로 이를 비판한다면, 기왕 주장의 일부 표현만을 교묘히 발제하고 있어 마치 그것이 주장의 전체인 양 각색한다면 그것은 검증이 아니라 엄연히 왜곡이다. 또한 어느 한 집단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이와 다른 사상 또는 이데올로기를 적대시하거나 매도한다면, 그것 역시 검증의 공정한 절차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신성시 절대화하는 일종의 공산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모 신문사의 '사상검증'의 해프닝은 검증의 기본적인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이데올로기 색깔하기'일 뿐이며, 어쩌면 우리사회를 통합보다는 분열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난'으로 여겨진다. 이제 진정한 검증의 칼날을 독재와 분단으로 삼지워진 '모순'으로 향하도록 하자. 그들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가 진정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증해 보자. 검증의 폭박 대신 이성적이고 공정한 검증의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이중원 / 편집기회위원·서울시립대

Cultural dimensions — The Korea Herald, 11.11. Professor Choi's precious voice

By Robert J. Fouser



The spat between the "Chosun Ilbo" and presidential advisor Choi Jang-jip, a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has now turned into a full-fledged battle. An article in the November issue of the "Wolgan (Monthly) Chosun" accused Choi of supporting the North Korean view of the Korean War as a "war of liberation."

In response, Choi argued that the article distorted his views; and he filed a libel suit against the newspaper company. The conflict has ignited strong emotions on both ends of the political spectrum, with conservatives demanding Choi's resignation and liberals attacking what they see as a new McCarthyism. The debate is as old as the conflict between right and left in modern Korean history. But the outcome will have important consequences for the future of academic freedom in Korea.

The outcome of the debate will have a direct effect on academic freedom in Korea. The "Wolgan Chosun" article accused Prof. Choi of using the Korean word "yok-sajok" (historic, historical) to imply a positive view of Kim Il-sung's decision to attack South Korea in

and subject to more scholarly scrutiny. To conservatives, these views are wrong, but they are useful in widening the range of discussion and thus contributing to a more balanced view of history. Scholars should entertain a wide range of ideas because scholarship advances from competition among diverse ideas over time. Scholars cannot entertain various ideas when academic freedom is subject to intimidation or prosecution.

Academic freedom has gained new relevance in Korea beca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announced that all professors in Korea will be hired under limited-term contracts starting in 2002. The measure is designed to increase competition among professors and prevent the egregious abuses of lifetime employment for which Korean academia has become famous. For the measure to work well, however, decisions about renewing contracts must be open and fair.

The conservative attack on Choi creates a climate that works against fairness in evaluating the quality of academic work because

it shifts the standard of evaluation from academic contribution to the field and society to the semantics of ideological conflicts. Such a shift will undermine the goal of increas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set out to achieve with its recent reforms.

By the standard of "academic contribution to the field and society," Prof. Choi is one of Korea's most outstanding scholars. He sets a standard of scholarship that should serve as a model for other professors to follow. His research is provocative, well documented, and respected by many scholars overseas. Few professors in Korea can claim so many accomplishments.

The "Wolgan Chosun" article on Choi does indeed distort his background because it only presents his views on the Korean War, which is not his main field of research. The paper claims that it has the right to scrutinize a public figure, but it has failed to include a fair evaluation of Choi's major field: political science. To defend itself, the paper placed Choi's "problem papers" on its Web site so that readers could judge for themselves. If so, then

why did it omit a list of publications and copies of Choi's other papers?

As a political scientist, Prof. Choi has focused most of his research on the issue of class in Korean society. Through his writing in English, he is known overseas as a leading scholar on class conflict in Korean society. During years of dictatorship, conservatives painted a distorted picture of Korea as a society where the "uri-ness" of the first scholars to openly investigate the painful differences in class that cut through Korean society. In doing so, his work became a voice for workers and the poor when other scholars were afraid to approach such sensitive topics.

With workers and the poor bearing the brunt of the economic crisis not of their making, Choi has much to contribute to national policy. Compared with many countries, the elite in Korea is narrow. Choi has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human and social costs of such a social structure. He has a vision of a society in which taxi drivers don't have to tell their children to lie about their father's job. Agree or disagree, Prof. Choi's voice is precious and it must continue to be heard.

The writer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Kumamoto Gakuen University in Japan. -- Ed.



매일시론



이삼성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최근 「월간조선」과 「조선일보」가 고려대 최장집교수를 상대로 전개한 이른바 「사상검증」이 학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존중하는 일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라는 공인에 대한 사상검증은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학자의 학문적 소신이 존중되어야 함을 인정한다면 학문적 경향을 떠나 그가 공인으로서 국가에 봉사할 권리도 동

한 부분을 이루었다. 그것은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민족주의가 강대국 헤게모니와 그와 연결된 토착 보수정권에 무력으로 도전하는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의 대부분의 자유주의적 현대사학자들은 베트남전쟁을 베트남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한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 학자들만이 아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마틴

사상검증과 학문

시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정 언론사의 취향에 맞는 학문을 한 사람만이 공인의 자격이 있다는 논리는 정치적 논리에 불과하다.

조선일보는 최교수가 한국전쟁을 김일성의 역사적 결정이라고 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가 한국전쟁발단의 책임을 둘러싼 것이었음을 생각한

최장집교수 6·25시각 중앙 일간지 의혹제기 조야한 정치공세에 불과

다면, 그것을 김일성의 결정으로 파악한 최교수의 결론은 이 주제에 대한 전통적 입장의 재확인에 다름 아니다.

조선일보는 또한 북한의 한국전쟁 행위가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을 띠었다고 지적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정치현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추구하는 학자일 경우 이 현상의 성격과 동인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정권의 성격과 전쟁행위의 동인에는 북한 양식의 민족주의, 군사적 모험주의 그리고 한반도공산화를 도모하는 사회주의혁명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되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과학에서 논의되어온 민족해방전쟁이란 개념은 우리가 그것을 정치이념적 관점에서 비판하든 수용하든 그것은 요소들이 복합된 정치현상으로서 20세기 제3세계 역사의 중요

루터 김 목사도 그리고 다수의 반공적인 정치인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전쟁 당사자들의 어느 편에 어떤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정치집단의 민족해방이데올로기가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그 전쟁의 결과로 진정한 민족해방이 왔는지 아니면 오히려 민족적 비극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쟁발발 책임자들의 시각과 객관적인 학문적 평가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최교수의 논문은 한국전쟁의 비극적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이끈 북한정권의 전쟁결정에 대해 지극히 준엄한 평가를 내렸다. 이를 두고 사상검증을 운위하는 것은 조야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학술적 논문의 한 자구나 개념을 문제삼아 학자가 공인으로서 나라의 개혁에 봉사할 기회를 박탈하려는 언론사의 기도는 개탄할 일이다. 김영삼정부 하에서 훌륭한 개혁적 인사들이 이같은 첩자로 희생되었다. 그 정권의 개혁의지의 허약성을 노렸던 것이기도 했고 일부 언론의 정치적 황포에 대해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관대함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현 정권도 전횡을 되풀이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태를 매카시즘을 존재기반으로 삼는 언론의 일부행태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학계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월간조선 販禁 이후 - 崔章集교수 특별인터뷰

“사상공세는 변화거부 반증”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고려대 崔章集교수(정치학)는 13일 「조선일보」의 사상공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보수 극우세력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崔교수는 또 북한 기자동맹 중앙위의 성명발표와 관련, “남한의 극우그룹과 민주주의 세력간의 논쟁을 격화시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저의”라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카운터파트’를 지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인식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월간조선의 판매·배포 금지 가져온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판매·배포 금지 판결 당연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금은 대외적으로 탈냉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적으로 사회평화와 국민통합, 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다. 이를 이행해 나가는 데 이번 사건(사상논쟁)은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법원 판결은 탈냉전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민주화를 다지는 개혁에 있어 장애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에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개혁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공세는 극우 보수세력의 변화 거부를 보여주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에 대한 견해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의 사상공세는 민주화된 상황에서 무제한적 자유를 향유한 언론이 국가권력 이상으로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판결은 이러한 인권

과거 구여권과 북한의 지도층은 그동안 냉전체제에서 기대 이익을 얻어왔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북한의 보수 기독교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남한의 보수 극우와 북한의 기존 지도층은 냉전 기독교세력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따라서 북한의 기자동맹이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원, 강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남한의 극우그룹과 민주주의 세력간의 논쟁을 격화시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그들의 성명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카운터파트’를 지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인민해방전쟁’ 용어는 北측 주장의 객관적 서술 일뿐

“韓國戰은 北의 오만·무절제가 빚은 참상” 인식 확고

北기자동맹 성명 자유민주세력 약화노린 의도적 행위

인식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남북화해 움직임에 찬물

●월간조선이 문제 삼고있는 ‘민족해방전쟁’ 등의 화술용어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것은 북한이 그렇

남침이었고 이러한 전쟁의 여파로 우리 민족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나는 일련의 저작을 통해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을 견지해 왔다.

북한측이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

한국전쟁이 북한권력의 오만과 무절제가 빚은 참상이라는 나의 인식은 시종일관 확고하다. 한국전쟁이 적화통일 야욕으로부터 비롯된

# 다양한 사상·주장 포용해야



崔景洵  
단국대 명예교수  
전 정치학회 회장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가 냉전의 산물이라면 탈냉전 시대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은 사상의 다양성이다. 이미 탈냉전 속에서 엄밀했던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석학 울리히 벡교수는 "냉전시대의 제노나 정치적 개념들을 가지고는 탈냉전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파하고 있다. 분명 이분법적 사상의 잣대로 현실을 분별하는 시대는 가고 있다.

## 이분법적 논쟁 끝낼때

최근 崔景洵교수의 논문을 왜곡 보도함으로써 벌어졌던 일련의 '사상논쟁'에 우리가 크게 주목하는 까닭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며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한 사법부의 판단과 관점으로 일단 자체하고 자중하는 태도도 돌아갈 계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가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벡 교수의 논지가 말해주듯 정치의 역사를 정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구 소련과 동구라파의 몰락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승리의 위기(Victory crisis)'속으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최근의 저서 속에서 앤디니 기든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극우 세력은 과거의 향수에 매혹되어 더 과격해져 폭력의 잠재성에 의존하게 된다." 그가 말하는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론폭력(言論暴力) 및 지적폭력(知的暴力)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적(敵) 아니면 동지라는 칼 슈미트적인 논리와 사고의 결과는 폭력의 재생산을 촉진할 뿐이다. 이러한 요지의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됨을 부인 할 수 없다.

의를 민주화(Democratizing of democracy)'하는 새로운 작업에 다같이 나서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기성품'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만에 야당이 이러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지는 의미는 다시 이분법적인 사고(思考)로 회귀하거나 뒷걸음질 여유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사상과 사고의 자양분을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실히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崔景洵교수의 '사상논쟁'에 내리진 이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 의의는 우리는 이 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소모적인 이분법적 사상 논쟁이 이 땅에서도 사라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번 사태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의 공간기관이 아닌 사회의 한 언론기관이 '사상검증'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보기에선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을 준다. 언론자유란 오보의 자유나 사실 왜곡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 위태로운 논리의 비약

더욱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심하게 나타내는 한 당사자의 말대로 "이번 싸움은 崔景洵교수 대 월간조선의 싸움이 아니라 崔교수 대 대한민국의 싸움"이라면 그 논리의 비약은 실로 위태롭기까지 하다. 북한과의 실권자였던 김일성도 흔들지 못 하였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崔교수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던 말인가. 참으로 '선정주의'의 단순논리치고도 정도가 지나쳤다. 다시, 이 분야에 권위있는 영국의 한 석학의 말을 들어보자. 좌파와 우파를 넘어

서'라는 최근의 저서 속에서 앤디니 기든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극우 세력은 과거의 향수에 매혹되어 더 과격해져 폭력의 잠재성에 의존하게 된다." 그가 말하는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론폭력(言論暴力) 및 지적폭력(知的暴力)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적(敵) 아니면 동지라는 칼 슈미트적인 논리와 사고의 결과는 폭력의 재생산을 촉진할 뿐이다. 이러한 요지의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됨을 부인 할 수 없다.

세 번째 메시지는 지식인인 崔景洵교수와 공인(公人)인 崔景洵위원장에 관한 내용이다. '아는 것이 힘'(베어컨)이라는 명제가 말해주듯이, 지식도 분명히 권력이다. 따라서, 지식인의 목소리는 권력으로 작용한다. 더욱 공인일 경우(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지식은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崔교수가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거나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가 높을 것이고,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논리 또한 단순한 이분법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 특정인 사상검증 요구는 합정

대통령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매일 떠들어대는 것이 누구인가. 언론들이다. 그러면서도, 사상의 다양성이나 주장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대한민국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민주적인 공인의 윤리와 그의 주장이 갖는 논리의 전제는 다양성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인 崔景洵만은 사상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허구이며, 음해의 합정마저 내포한다. 탈냉전을 맞아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관용이 필요한 때이다.

가치분' 신창에 대한 법원 결정문(전문)도 실었다.

백서는 "지난 10월 19일 발간된 월간조선 11월호가 崔景洵교수를 음해하는 기사를 게재한 뒤 조선일보에는 20여일 동안 보도기사, 사설, 칼럼, 만평, 가십, 독자투고 등 모든 지면을 할애해 崔교수를 공격하는 한국의 언론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吳豊淵

poongynn@daehanmaeil.com

## '崔교수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백서' 발간

사건일지·음해사례·여론·법원결정문등 실려

### 고려대 대학원 정의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의과는 13일 '崔景洵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왜곡 음해 보도 관련자료'라는 164쪽 짜리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는 사건일지, 조선일보사의 이념 음해 보도 내용, 조선일보의 왜곡날조 사례, 성명서 모음, 각 신문사의 기고문 및 칼럼이 실려 있다. 네티즌의 여론, 崔景洵교수 논문 의 서평 모음, 崔景洵교수 저서 심의 결과, 출판물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 학술

문화일보 제 153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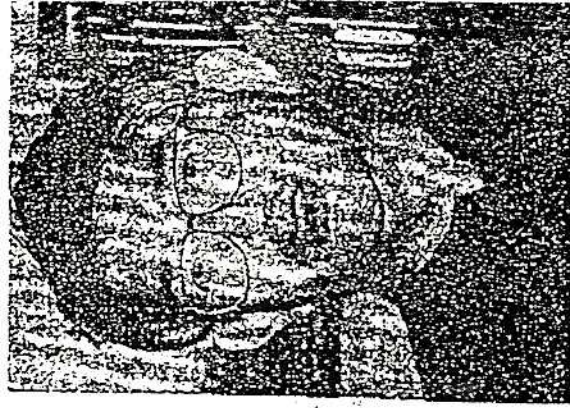
1996. 11. 04

96년 11월 40

# “우리사회 문제 多元분석”

崔景洵교수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출간

「김영삼 정부기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과 이데올로기 변화」라는 제목의 1년간 인식을 종합한 모은 이 책은 현재 법이되고 있는 사태뿐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성격 및 분단국가 정성문제, 한국전쟁과 민족주의 등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규정지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崔景洵교수는 「규범적이거나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접근보다는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해방후 남북한에서 각기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다.

「국단적인 평가가, 총괄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지적 공간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崔교수는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한국 민주주의를 다룬 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崔永福기자>

## 善惡 2분법 배제-“자유주의 知的 공간 확장”

정당한 의미에서의 국민국가의 성립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시기라는 주장이 흥미있다. 그러나 崔교수는 「한국이 단일한 민족국가일 때만 근대 국민국가가 완성된다는 것은 너무 현실을 규정적으로 본 것」이라며 「영어의 네이션(nation)을 인종(ethnicity)이 라는 의미와 같은 「민족」으로 이해하며 서 비뚤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 사회에서 평등한 시민권을 갖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민중이라는 의미 될 가진 근대적 「국민」이라는 본뜻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문제할 을 단순히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구조로 보자는 崔교수의 주장. 예를 들어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정권에 대한 평가문제의 경우 두 어떤 것이 바람직하느냐보다는 실 제 집권 당시 무엇이 있었느냐에 관한 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를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재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현실에서 역 사 기층이 자기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 파편화·분열화한 것이 한국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일관되게 추구해온 정치학자 崔景洵교수(53·정치외교학)가 자신의 4번째 저서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11월14일)을 출간했다. 그동안 유신체제의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동운동과 무기」,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문제를 다룬 「한국 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등의 저서에서 현실문제와 남북한을 비교해왔던 그가 스스로 비판의 문물 다소 누그러뜨렸다고 평가하는 책이다.

## IV. 기타 관련 자료 모음

### 崔章集 교수 저서 심의 결과

#### 1. 해당 도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견

-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출판사, 96.10.15 발행)
  - 1997. 1. 30 심의
  - 심의위원회 결정 : 불문
-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93.4.10 발행)
  - 1993. 5 27 심의
  - 심의위원회 결정 : 불문

#### 2. 도서의 내용 요지

-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국민주주의를 위한 조건과 전망을 탐색하기 위해 해방 이후 전개된 한국 근대화의 성격, 분단국가 형성, 한국전쟁, 자본주의와 산업화 등을 주제로 역사적,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거나, 노동, 통일 등 80년대의 민주화와 관련한 사건들을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과 민주주의 이행 및 공고화를 위한 진통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한 글 등을 수록.
-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국 민주주의의 제 측면을 이론, 설명, 이행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한국의 과대 성장 국가를 비판하거나 한국 정치세력의 균열 현상과 민주화 실험을 설명하고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92년 대선 전망을 민주주의 이행의 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기술한 글 등을 모은 것임.

#### 3. 당시 심의위원회의 평가

- 당시 심의위원회의 기본입장은 체제 전복을 선동하며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내용이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학자들의 ‘하나의 시각’ 차원으로 보아 학문의 자유를 감안하는 입장이었고,
- 관련 도서들을 분단과 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상황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각각의

측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관계 당사국이나 여러 정파의 입장과 상황 관계 과정을 입체적으로 모두 다루고 있어, 친북한적 논리를 단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도서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 또한 이 책의 출간된 시점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도서들이 이미 소장학자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출간된 바 있었고,
- 전체 도서의 분량에 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논문의 분량이 극히 부분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도서들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불문”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719-4896)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 건 98카합3441 출판물 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인 최장집

서울 종로구 평창동 174의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 주석영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보증으로 금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자신이 편집한 월간지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통권 제224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월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월간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 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만,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한 후 위 월간지의 보관을 풀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판독할 수 없게 삭제한 후에는 위 월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2.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월간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내용이 포함된 단행본, 일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광고지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또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신청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를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월간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내용이 위 월간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은 위 목록 기재 내용이 포함된 책(단행본) 및 주간지 또는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발행, 판매, 배포, 대여, 사용케 하거나 또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의 경우 각 그 인쇄물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1억원씩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본원칙

가. 우리 헌법이 그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고 있고, 그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임이 분명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정책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함이 당연하다.

또한,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므로, 신청인이 과연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과거에 발표한 논문·저서 등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출판하는 것 자체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고위 공직 임명자에

대한 취임전 청문회 절차 등이 완비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하에서는 그와 같은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더욱 클 것이다.

나. 그러나 언론·출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헌법 제21조 제4항), 고위공직자의 신념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다거나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적 주장의 대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장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견해의 표명에 대하여도 공정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나 비방증상이나 과도한 인신공격이 되는 정도의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라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법체계(국가보안법 제7조)를 감안하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 기타 좌경사상을 신봉한다는 사실적 주장은 물론, 단지 그에 동조한다거나 좌파적 또는 친북한적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또한, 정기간행물 기사의 표제는 그 기사 본문과 합하여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됨이 원칙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부 내용이나 문구를 전체 기사의 제목으로 삼음으로써 그 독자들에게 부여하는 인상이 왜곡될 수 있다면, 설령 그 표제가 기사의 대상 인물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 문구를 그대로 인용, 전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저서의 일부를 발췌한 기사의 경우에도 그 저서의 전체를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은 그 흐름과 맥락을 알지 못하고 발췌된 부분만을 읽음으로써 사실적 주장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2.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

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통권 제224호, 이하 이 사건 월간지라고 한다)중 206쪽 이하에 실린 "심층취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및 위 월간지의 표지와 목차를 살펴보면, 그 내용중 적어도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은 신청인의 저서인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이하 신청인의 제1저서라고 한다)과 같은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이하 신청인의 제2저서라고 한다)의 일부

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앞 뒤 문맥에 비추어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신청인을 더 좌파적 인물로 묘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 가.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 관련 부분

이 사건 월간지 표지에는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목차에는 “「6.25 戰爭은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 「南進은 민족해방전쟁, 北進은 가공할 사태」”라는 부분이 있으며, 이 사건 기사 본문 206쪽 윗부분에는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본문보다 작은 활자의 박스기사가 있는바, 그 안에는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본문 211쪽 3단에는 “최위원장은 남북간의 이같은 정치상황의 차이가 북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는 부분과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부분이 비록 신청인의 제1저서 중 특정 부분(76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그 부분 바로 앞에는 “김일성은...그의 우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그를 전쟁을 통한 총체적 승리라는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하였던 요소는...”이라고 표현하여, 김일성의 전면전 결심이 잘못된 판단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위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결단」의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 정도의 가치중립적 표현임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표현을 문제삼아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대제목으로 부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부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개전 초기의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 관련 부분

이 사건 월간지 목차에는 “「南進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사건 기사 본문 207쪽 윗부분에는 “「開戰 초반 민족해방전쟁...」”라는 부분이 있으며, 이 사건 기사 본문 210쪽 1단에는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開戰 초기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라는 요지로 해석했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1저서, 제2저서는 물론 다른 저서에서도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으며, 단지 제1

저서의 125쪽부터 126쪽까지에서 한국전쟁을 네가지의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고유의 성격을 서술하면서, “첫번째의 시기에서의 전쟁은 전쟁을 유발한 북한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었던 반면...”이라고 논술하고 있음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이른 바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를 ‘북한당국자들이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성격’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이 제1저서에서 위 용어 앞뒤에 부가한 작은 따옴표를 생략하여 민족해방전쟁이란 용어가 마치 신청인의 생각 그 자체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읽혀지도록 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제1저서를 직접 읽어 본 적이 없는 독자들이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은 가공할 사태이며, 중공군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관련 부분

이 사건 월간지 목차에는 “「...北進은 가공할 사태」”라는 부분이 있고, 이 사건 기사의 본문 207쪽 윗부분에는 “「北進은 가공할 사태」”라는 부분이 있으며, 같은 본문 208쪽 1단에는 “「38도선 이상으로의 北進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는 부분이 있고, 같은 본문 209쪽 1단에는 “「北進은 가공할 사태」”라는 부분이 있으며, 같은 본문 210쪽 1단에는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開戰 초기 한국전쟁이 ... 국제전으로 변질된 전환점은 38선 이북으로의 北進」이라는 요지로 해석했다.”는 부분이 있고, 같은 본문 210쪽의 1,2단에는 “38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은 전쟁의 진행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38선 이상으로의 북진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1저서에서 이 사건 기사와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은 위 저서 128쪽은 “북진강경론자의 선봉 딜레스 등을 필두로 하여 맥아더 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트루먼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당국은, 특히 그들의 강경파는 친미반공정부를 북한으로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만주에 원자탄 투하나 필요한 중국해안지역에 미군의 지원에 의한 국민당군의 상륙을 포함하는, 중국대륙으로까지의 확전을 포함하여 중공정권을 궤멸시키려는 원대한 구상을 전쟁정책 속에 포함하고 있었다. 만약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소련의 한국전 참전과 소련군의 서유럽 국가와의 전쟁을 강제하는 3차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하는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라고 논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장의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문맥상 위 "이것"은 3차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3차대전이 38도선 이상의 북진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위 기사 부분과 같이 북진 자체가 가공할 사태라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신청인의 제1저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전제하면서 위 "이것"을 "38도선 이상으로의 북진"으로 대체하여 위 저서를 직접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지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 3. 나머지 부분

이 사건 기사중 위 제2항에서 실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신청인의 이 사건 제1, 2저서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인용후 정통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비판형식으로 개진한 것으로, 군데 군데 인용상 사소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위 기사는 정치학자가 아닌 기자가 정치학의 전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독자를 상대로 하여 통상인의 수준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그 기자에게 정치학자 수준의 분석을 거친 완벽한 기사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저서나 논문은 집필자의 집필 당시의 내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외면적 표현형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점, 검증 대상인 인물이 더 유명할 수록, 더 고위직에 있을수록 그 인물 개인의 명예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나머지 기사 부분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기사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1998. 11. 11.

재판장 판사 신명철  
판사 박성수  
판사 광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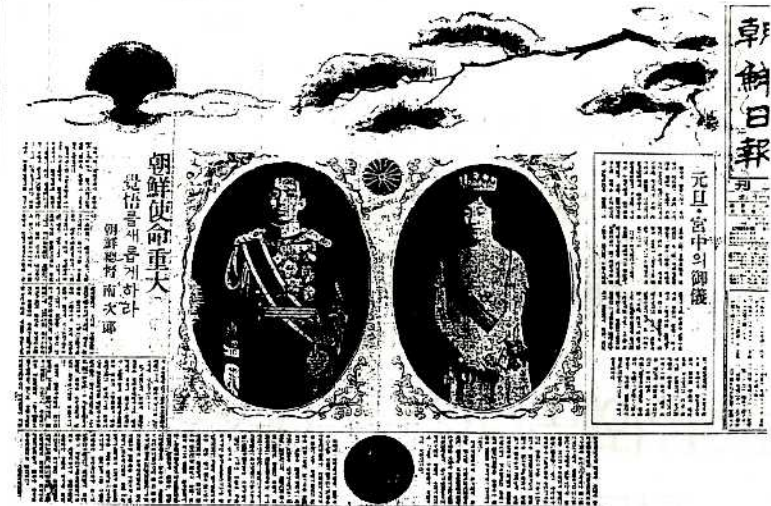
## 제 1 목록

1. 표지의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목
2. 목차의 "●「6·25 戰爭은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南進은 민족해방전쟁, 北進은 가공할 사태」" 부분
3. 본문 206쪽 윗부분의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박스기사 중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부분
4. 본문 207쪽 윗부분의 "●「開戰초반 민족해방전쟁, 北進은 가공할 사태」" 부분
5. 본문 208쪽 1단의 "「38도선 이상으로의 北進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 부분
6. 본문 209쪽 1단의 "「北進은 가공할 사태」" 부분
7. 본문 210쪽 1단의 "「남침은 민족해방전쟁」" 부분
8. 본문 210쪽 1단의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開戰 초기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국제전으로 변질된 전환점은 38선 이북으로의 北進」이라는 요지로 해석했다." 부분
9. 본문 210쪽 1, 2단의 "38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은 전쟁의 진행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38선 이상으로의 북진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다" 부분
10. 본문 211쪽 3단의 "최위원장은 남북간의 이같은 정치상황의 차이가 북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부분과 같은 곳의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부분

제2 목록

- 최장집 교수가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 최장집 교수가 6.25를 호의적이라거나 긍정적으로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 최장집 교수가 6.25의 발발책임이 김일성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 최장집 교수가 6.25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불리하게, 북한에 대륙선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 최장집 교수가 6.25가 남한정부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 최장집 교수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부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 최장집 교수가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게끔 유도했다고 취지의 내용
- 최장집 교수가 미·소가 합의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끝.

사상검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38년  
1월 1일  
조선일보  
신년인사에  
일왕부부  
초상화 게재



1939년  
4월 29일  
조선일보  
히틀러 연설  
대서특필

蹂躪된 權利를要求

루大統領에應酬, 이總統

조선일보는 최장집 교수 파문에 관해 독일에서의 '공직자 사상검증'을 예로 들어 자신들의 왜곡보도를 정당화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사상검증'은 파시스트들에 대한 역사적 검증과 단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상검증'은 독일과 같이, 입제하에서 파시즘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친일파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4부>

# 『조선일보허위·왜곡보도공동대책위』

## 활동 모음

1. 국민에게 드리는 글
2. 월간조선 조갑제 기자와 안기부 커넥션 진상규명 성명서
3. 월간조선 조갑제 기자와 안기부 커넥션 진상조사 요청서

## 국민에게 드리는 글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를 발족하며

변화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우리는 금강산 관광단이 동해항을 출발, 북한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씨가 소떼를 몰고 두차례 북한을 방문한 뒤끝입니다.

지난 날 군부독재시절, 권부의 밀사들이 남북을 서로 오갔지만, 그들이 내밀히 나눈 대화들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군부독재시절, 권부의 밀사들이 남북을 서로 오갔지만, 그들이 내밀히 나눈 대화들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또 ‘막걸리 보안법 사범’도 있었고 민주화운동으로 하여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이적행위’로 내몰려 고문받고 투옥되었습니다. 이른바 ‘불은서적’을 읽었다고 반공법에 위하는 사례도 무수했습니다.

그 시절이 바로 어제 같은데 지금은 북한돕기를 위해 종교인들이 북녘을 드나들고, 언론인들이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대결에서 화해와 교류로, 남북한의 변화는 이제 시대적 대세입니다.

### 남북 화해·교류론자들은 ‘친북인사’ 입니까?

그런데 ‘어제’의 냉전논리에 바탕해서 2차대전 전후의 이데올로기 잣대로 ‘오늘’의 변화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변화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를 성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극히 일부세력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남북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빨갱이’처럼, ‘빨갱이를 닮은 분홍빛 색깔의 수상한 사람’으로 몰아부치거나 ‘친북인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탈냉전 이데올로기가 지구촌을 휘감고 있고 세계문명의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50년대식의 이데올로기 여론재판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세계가 우리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듯이 우리도 북녘으로, 아시아로, 세계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가 발족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 1) 조선일보사는 민주화운동을 매도했습니다.

『월간조선』 11월호에서 조갑제 편집장은 편지형식의 글에서 “지난 10년간의 민주화는 언론인과 정치인들 그리고 노조, 농민,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들에게 특히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 자유를 국가이익의 증진보다는 사익, 즉 당파적·지역적·집단적 이익의 증진에 주로 썼습니다. … 민주화란 말은 이기주의와 당파성을 근사하게 위장하는데 더할 수 없이 좋은 명분과 간판을 제공했습니다.”

‘나라의 민주화’는 87년 ‘6월 항쟁’의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6월항쟁’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민주화를 위한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바로 조선일보와 같은 반민주적, 구체제 지향적 시각을 가진 집단들이 사회 각 분야의 상층 엘리트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의 언론자유가 극우적 선동저널리즘의 포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 2) 조선일보사의 ‘사상검증’은 언론자유가 아니라 언론폭력입니다.

『월간조선』 11월호의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으로 비롯된 기이한 ‘사상재판’에서 가치분심리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법체계 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소위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사실적 주장은 물론, 단지 그에 동조한다거나 좌파적 또는 친북한적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학문과 사상의 다원화로 나아가야 할 이 민주화시대에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안세력들이 남용했던 ‘사상검증의 공포정치’역할을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조선일보사에 위임한 것입니까?

조선일보사는 또 스스로 떠맡겠다고 나선 ‘공인의 사상검증’을 위해 사실의 과장과 왜곡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자유가 아니라 언론폭력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는 신성한 자유지만, 그 자유가 허위로 말할 자유, 사실을 왜곡할 자유까지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3) 조선일보사는 지난 날 ‘사상검증’으로 햇볕정책을 5년간 후퇴시켰습니다.

93년 김영삼정권 집권초기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대북 ‘햇볕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바로 그 때 『월간조선』은 한완상 부총리를 친북인사로 매도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삼정권은 그해 가을 한완상 통일원장관을 경질했고 햇볕정책은 대북강경노선으로 회귀했습니다. 5년이나 지연된 오늘날의 햇볕정책을 조선일보식 사상공세 때문에 또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지난날 군사독재자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형 언론’으로 성장해 온 조선일보사가 오늘날까지 비민주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일보사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언론의 정도로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언론폭력과 사상적 마녀사냥에 대해 조선일보사가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다면 범국민적으로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나라의 민주화와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한 우리들의 행동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격려후원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1998년 11월 19일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강정구 (학술단체협의회 의장)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

문대골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경숙 (여성민우회 대표)

참가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고려대대학원총학생회/국민승리21/  
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도봉청년회/목회자신문사/메비우스/  
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학작가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민주노총/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불교언론대책위/사월혁명연구소/  
새대구경북시민회/언론개혁통신연대/언론지킴이 천주교모임/여성민우회/유스넷/  
인권운동사랑방/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청년정보문화센터/학술단체협의회/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프로듀서연합회/환경운동연합 (이상 40개단체)

## 조선일보사에 보내는 공개서한

- 발신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 수신 : 조선일보사 방우영회장, 방상훈 사장
- 참조 : 조선일보사 편집간부 및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유쾌할 수 없는 이 글을 보내게 된 우리 시대의 불행에 대해 개탄하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먼저 아래에 밝혀둔 40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이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공대위를 결성하게 된 동기는 최근 귀사의 몇몇 기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매도, 최장집 교수에 대한 매카시즘적 사상논쟁과 친북매도 보도 등에서 엿보이고 있는 귀사의 반민주적 보도행태 때문입니다.(별첨:국민에게 드리는 글 참조)

3.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대위'를 구성한 여러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성명·토론회·집회·시위 등을 통하여 귀사의 극우적 선동저널리즘과 언론폭력에 대해 여러번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이들 단체들 상당수를 '좌익세력'으로 몰아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공동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오늘 결성된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는 귀사에 대해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가. 귀사는 이제라도 즉각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중지하고 언론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나. 극우적 '선동저널리즘'으로 50년대식의 좌우대결을 부추긴 조갑제 편집장, 우종

창 기자를 퇴출시켜라.

다. 귀사는 시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단체들을 매도한 데 대해 지면을 통해 사과하라.

5. 공대위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귀사의 답신을 1998년 11월 23일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6. 11월 23일까지 만족할만한 대답이 없는 경우 공대위는 1998년 11월 24일부터 우선 아래와 같은 대응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가. 조선일보 안보기 운동

나. 조선일보 보도자료 제공 및 인터뷰 안하기 운동

다. 조선일보에 광고 안하기 운동

라.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7. 공대위는 이러한 4대 실천운동 이외에도 귀사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앞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귀사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할 것입니다.

8. 귀사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998년 11월 19일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강정구 (학술단체협의회 의장)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

문대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경숙 (여성민우회 대표)

**-우리는 조선일보의 취재를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일보와 관련된 월간 '말'지 12월호 기사를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말'지 12월호에는 조선일보 조갑제 기자가 지난 김영삼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의 사실상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죄하고 관련자를 하루속히 퇴출해야 마땅하다. 또한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고 월간 '말'지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조선일보에게 정론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일보의 곡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투철한 기자정신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자정능력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조선일보에게 최장집 교수에 대한 허위 왜곡보도와 관련하여 사죄하고 관련자를 퇴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보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욱 강도 높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조선일보에게 자료제공을 거부한다
- 우리는 조선일보의 기고,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한다
- 우리는 조선일보의 허위왜곡 보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1998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조갑제씨와 안기부커넥션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조선일보는 조갑제씨가 기자윤리를 저버렸다면 그를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

말지 12월호에 의하면 “이선실사건 수사발표문 손봐주고 안기부 돈받았다.”라는 제목하에 조갑제씨가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안기부 수사발표문을 손질해주고 당시 대공수사국장이던 정형근씨의 비자금에서 1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조선일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갑제씨를 즉각 해임시키고 조선일보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1.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진실을 밝혀기를 바란다.**

말지에 의하면 92년 10월 4일 엠버서더 호텔 안기부 안가에서 조갑제씨와 안기부 직원들간의 만남과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날짜, 장소, 사람, 작업내용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적어도 없는 사실을 일부러 가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돈을 건네준 안기부 직원의 신분과 소속팀까지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조갑제씨를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2. 왜 조선일보사는 월간 말지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소에서 이 내용은 거론치 않는가?**

최근 조선일보사는 대석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월간 말지 12월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박충렬사장과 정지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소장에는 조갑제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글을 작성한 오연호 기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단지 이한우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만 있다. 조선일보사는 조갑제씨에 대한 글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인지를, 사실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3. 조갑제씨가 기자윤리를 위반했다면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언론과 수사기관이 보도되기 전의 기사를 서로 감수해 주었다는 말지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가 그랬다면 이는 명백히 기자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다. 기자가 수사기관들의 미팅에 참여하고 수사발표문을 손질해 줬다면 이는 안기부 공보관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월권행

위일뿐 아니라 안기부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다. 지난 군부독재 시절 권력과 언론의 유착, '권언유착'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때 항상 조선일보는 국민들에게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도 조선일보는 조갑제씨가 만일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를 즉각 해임시키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98년 12월 7일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 박승원, 문규현 신부

###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과 안기부의 밀실거래 진상을 규명하라

#### - 조갑제 기자와 정형근 전 안기부수사국장의 커넥션 의혹을 개탄하며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공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뒷거래를 주고받았다는 보도에 우리는 충격을 금치 못한다.

월간 말 12월호는 각종 자료와 증거를 통해 92년 '조선노동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조갑제 기자와 정형근 수사국장이 서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도 10월 28일자를 통해 92년 월간조선과 안기부의 밀실 거래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92년 9월 조갑제씨 등 월간조선 기자들은 시내 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과 만나 조선노동당 수사의 브리핑을 받고 이를 월간조선 10월호에 '특종'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조갑제씨는 10월 6일 안기부 공식수사발표문을 '손봐주는' 등 협조했을 뿐 아니라 안기부로부터 1백만원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우리는 조갑제씨가 과연 언론인인지, 공안기관의 협조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일차적 사명은 국민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 언론이 오히려 지난날 공안권력의 핵심이었던 안기부와 유착돼 정보와 보도를 거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월간조선은 안기부가 제공한 정보를 '쌍방취재' '확인취재'라는 기본 절차조차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는 비상식적인 보도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도가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색깔공세에 악용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언련은 이번 월간조선과 안기부의 유착 여부를 밝히는 일은 언론의 정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일뿐 아니라 언론을 악용한 구시대적 색깔시비를 근절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수차에 걸쳐 조선일보사의 안보상업주의와 권언유착 행태를 지적하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조선일보사는 이를 철저히 묵살해 왔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일보사는 이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선일보사는 조갑제 기사를 해임함은 물론, 국민 앞에 공식사과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위의 요구를 또 다시 묵살한다면 우리는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들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펴 나갈 것이다.

1998년 12월 8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內 전화 3273-1529 전송 714-1255

1998. 12. 16

발 신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최문순 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조성모 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성병욱 회장)

제 목 :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과 안기부 커넥션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언론민주화에 힘쓰는 귀 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월간 말 12월호가 보도한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과 안기부 커넥션 의혹'에 대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진상규명과 조갑제 기자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월간 말의 보도는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갑제와 월간조선은 기본적인 기자윤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일어날 당시 월간조선은 안기부의 공식수사 발표가 있기전 안기부로부터 사건을 브리핑 받고 이를 월간조선 10월호에 기사화 했다.

- 이 과정에서 조갑제 편집장을 비롯한 월간조선 기자들과 당시 안기부 수사국장 정형근 등 안기부 직원들은 수차 만남을 가졌다. 안기부는 월간조선의 기사를 직접 '감수'했으며 조갑제 편집장은 안기부의 공식수사결과발표문을 손봐주었다.

- 이 대가로 안기부는 정형근씨의 비자금 가운데 1백만원을 조갑제 기자에게 주었다.

- 이 사건 외에도 안기부와 월간조선은 각종 공안사건 보도 과정에서 '동반자 관계'를 맺어 온 의혹이 있다. 월간조선은 이들 사건을 기사화할 때 안기부의 주장을 확인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기사화 했다.

위와같은 충격적인 기사에 대해 월간조선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조갑제 기자만이 "사실무근" 이라면서 월간말과 오연호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의 혐의에 대해 언론계가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안기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용공조작을 일삼았고 인권유린도 서슴지 않았던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죄악입니다. 바로 월간조선과 조갑제 부장이 그 유착의 핵심에 있었다는 보도는 목과할 수 없는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누가봐도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간 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갑제 기자는 권력남용에 동조한 셈입니다. 심지어 돈까지 받고 과거 독재정권의 비밀정보기관에 협조했다는 것은 양심있는 언론인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 언론인 개인, 또는 조선일보사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언론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번 사안이 목과된다면 이와같은 사례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상규명없이 묻어둔다면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으로 미루어볼 때 조갑제 기자의 혐의에 대해 법원의 재판과는 별도로 언론계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자협회나 언노련 등 민주언론을 위해 힘쓰시는 단체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중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 공한을 보냅니다.

우리는 귀 단체가 조갑제 기자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언론계가 이 문제의 진상규명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귀 단체의 건투를 빕니다.

1998년 12월 16일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정구 문규현 문대골 성유보 이경숙

참가단체 (가나다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고려대학원총학생회 / 국민승리21 / 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도봉청년회 / 목회자신문사 / 매비우스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학작가회의 / 민족예술인총연합 / 민주노총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 바른지역언론연대 /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 불교언론대책위 / 사월혁명회 / 새대구경북시민회 / 언론개혁통신연대 / 언론지킴이천주교모임 / 여성민우회 /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 유스넷 / 인권운동사랑방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목회자들의평화실천협의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청년정보문화센터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프로듀서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이상 43개단체)



## 진중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 -일그러진 우익들의 초상-

난 '파시즘'이 싫어요

어느날 히틀러의 일기가 발견된다. 네오 나치들은 열광한다. 그러나 이 일기가 가짜임이 밝혀진다. 일기에 사용된 종이가 실은 히틀러가 사망한 이후인 50년대산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들은 거꾸로 추론을 한다. "그럼, 총통은 아직 살아계시다!"

재기 넘치는 독설고 변죽이는 풍자로 극우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을 '개그'로 만들어온 문화평론가 진중권(35)씨가 그동안 써온 글들을 다듬어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라는 제목으로 묶어냈다. 전 2권, 개마고원 펴냄.

이 책의 제목은 현재 <조선일보>에서 연재중인 박정희 전기 '내 무덤에 침을 뱉아라'를 비꼰 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글은 '박정희 숭배'를 열성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조갑제<월간조선>편집장과 작가 이인화씨, 근거 없는 '주사파' 발언으로 술한 송사와 말썽을 빚어온 박홍 전 서강대 총장,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옹호한 작품 <선택>으로 논란을 낳은 작가 이문열씨 등에 대한 직격탄이다. 그는 이들의 글이 단순히 우익의 이념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사상과 일치함을 정교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극우 파시스트 연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지은이는 이들의 글이 "학적 '비판'의 대상이 못되"기 때문에 자신의 글을 "문학적 풍자"로 읽어달라고 주문한다. 극우 인사들의 말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에 빠진 것임을 입증하는 그의 절묘한 글쓰기 전략은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따라서 얼마나 '웃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령 박정희가 대구사범학교 시절 "1학년 60등/90명, 2학년 47등/80명, 3학년 67등/74명, 4학년 73등/73명"이라는 성적을 남긴 사실을 두고 "5학년 때 장기 결석을 41일이나 하고도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머리가 좋다는 증거가 되었다"며, "황민화를 목적으로 한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여 모범생이 되는 길은 포기하고(...) 군사교육에만 열중"했다는 조 편집장의 기이한 해석에 대해, 지은이는 이렇게 묻는다. "꼴찌도 박정희가 하면 이렇게 '머리가 좋다는 증거', '황민화'를 거부하는 보이콧 투쟁, 민족해방 투쟁의 일환이 되죠?(...) '황민화'교육도 박정희가 받으면 이렇게 '전인 교육'이 되죠?(...) 일제의 '군인척유나 교육칙어'도 박정희가 외우면 '황민화'가 아니라 '동양적인 혼과 도덕관'이 되죠? (...)이렇게 투철한 '민족혼'을 가졌다는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가려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손가락을 베어 혈서를 쓰고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쓰고 난리를 쳤다죠? 왜 그랬대요?"

지은이는 또 <인간의 길>이라는 장편소설에서 박정희를 '한국에 근대를 도입한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는 이씨의 논리가 독일 파시즘 사상과 포개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씨는 박정희가 '영웅적인 천분'을 지닌 '위인'이며, 그 앞에서는 '악조차도 의미를 상실'하는 '절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최초로 대의를 위한 동기가 있었고 그것의 실질적인 결과가 대의에 합

당했다면 그 범죄는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범죄가 설사 헌법을 파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도의 인간적인 도덕성의 표출일 수 있다"는 케번도 서슴지 않는다. 지은이에 따르면 "지도자에게 무시로 헌정을 파괴할 권리를 주는 것,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우기는 것, 국가적 목적 앞에 개인주의를 무시하는 것, 지도자 숭배" 등 이씨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독일 파시스트 이데올로그 카를 슈미트의 저서에 고스란히 다 들어 있다."

지은이는 최근에 논란이 된 최장집 교수에 대한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조선일보>의 사냥 논리가 학술용어를 주관적 가치 평가어로 해석하는 범주 오류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며, 이 웃지 못할 소동이 실은 파시스트 특유의 괴상한 사회방언에 그 뿌리를 둔 것으로 드러난다." 지은이는 <조선일보>가 학술용어를 주관적 가치 평가어로 해석하는 오류에 대한 반격의 예로 조갑제와 박정희의 말을 인용한다.

"박정희가 사회주의에 관심을 일정하게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당시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족해방문제'와 관련해서였을 것이다." (조갑제), "역사의 창조자인 한국 '민중'(농민들)은 집권적 관인적 토지 소유제하에서 반농노적 지위에 처해 있었고 봉건제 신분제의 장벽은 '민중의 해방'을 불가능케 해온 것이다." (박정희)

덧붙여 지은이는 사상검증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을뿐더러 나아가 남의 사상을 검증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좌파도 수상(슈뢰더)이 되죠? 장관이 되죠? 심지어 공산당 후신도 의회에 의석이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공직자 검증, 헌법 수호를 철저히 하자고 주장한다. 프랑스나 독일에서 나치에 협력한 파시스트들을 처벌하는 것처럼 만주군 장교였던 박정희 등 친일세력, 전두환, 노태우 등 헌법 파괴세력들을 철저히 척결하자라는 것이다.

끝으로 지은이는 <조선일보>의 마녀사냥에 대한 방책으로 <조선일보>논설위원인 류근일의 말을 인용한다. "신문사 내부의 세대 교체나 자정운동이 ...중요합니다 ...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용감한 시민들이 고소를 해서 재정적인 망신을 시키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